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 동 원 부 연구 위원
박 혜 진 연구 조 원

연구 담당

김동원	부연구위원	조사기획 및 집필 책임
박혜진	연구조원	조사진행 및 조사결과 정리
자 문	최지현, 오내원, 최경환, 허 장, 김경필, 마상진	

머 리 말

농촌인구의 노령화, 농촌-도시간 양극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농업 피해대책과 구조조정 문제 등, 2007년에는 농업·농촌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국제 통상협상과 관련한 논의 속에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우리 농산물 시장의 보호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농업·농촌 문제는, 안전한 식품을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에서 부터 컴퓨터의 기능을 유지하는 일까지 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8년 1월 한달간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852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점이 새정부 출범 직전임을 감안하여 도시민과 농업인의 새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참여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평가도 실시함으로써 이 조사가 새정부 농업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사 보고서가 도시민과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에 기초한 농업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전국의 도시민과 현지통신원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이 조사 보고서는 정책연구에 참고할 목적으로 2008년 1월 한달간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임.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73.6%는 새정부의 농정공약이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도시민과 농업인의 과반수 내외(도시민 45.3%, 농업인 69.0%)는 새 정부가 농업·농촌 문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농업인은 새정부 농정공약 중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에 관심과 기대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 ‘농지거래 규제 완화’ 순으로 나타나 소득보장 관련 공약에 관심이 컸음.

농업인은 투융자사업과 관련해서도 ‘직불제’(29.3%) ‘농촌 지역개발’(13.7%), ‘농외소득원 확충’(13.5%)에 투자 확대를 주문한 반면, 도시민들은 농업예산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33.7%), ‘식량자급률 향상’(21.9%), ‘식품의 안전성 확보’(19.1%)에 투자되기를 희망함.

농지거래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서는 도시민 73.2%, 농업인 68.5%가 찬성했으나, 도시민 26.7%, 농업인 25.8%가 반대하는 등 국민 4명 중 1명은 신중한 접근을 바라고 있음.

농업인들은 새정부 최우선 농업현안 과제로 ‘개방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마련’(47.4%) ‘소득안정 대책’(17.4%), ‘도시-농촌 양극화 해소방안 제시’(15.0%) 순으로 꼽았음.

도시민의 57.9%가 가장 우려하는 농업·농촌 문제로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를 꼽았음. 다음으로 ‘식량공급 차질’, ‘환경파괴’, ‘농산물 안전 문제’를 우려함.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은 ‘원안대로 국회 비준 노력’ 각 36.5%, 26.6%, ‘비준 원점에서 재검토’ 각 31.9%, 42.6%, ‘국민투표로 결정’ 각

31.6%, 24.2%로 농업인들은 비준 반대의견이 우세했으나, 도시민들은 의견이 분산되었음.

한-중, 한-EU FTA 등 향후 통상협상에서 ‘새정부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시민 73.0%, 농업인 76.8%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가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시민은 농산물 구입조건 우선순위를 안전성-품질(맛)-생산지(국산/외국산) 순으로 선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74.6%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해 ‘우리 농산물이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86.5%가 동의하여 국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음.

도시민 85.8%가 농업이 여전히 국가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는 39.1%만 찬성하여 전년보다 13.7%p 감소했음.

농촌관광을 경험한 도시민 중 절반 정도만(45.9%) 농촌관광에 만족했다고 응답하였음. 불만족 요인으로 꼽은 교통, 숙박, 청결 등 농촌관광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촌지역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요구됨.

이밖에, 농업인 의식변화는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생활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촌 노인복지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아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며느리가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농업·농촌의 중요성 인식과 우리 농산물 신뢰도 등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편이지만, 공익기능 가치인식과 실질적인 지원 의사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ABSTRACT

Survey Results on the Public's Conception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performed a survey titled 'Research on the Public's Conception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on 1,500 urban residents and 852 farmers from January 2 to January 25, 2008.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farmers had the most interest and expectations on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on subsidizing the income of farmers and fishermen as pledged by the new government.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farmers had great interest in income security-related pledges: the two issues of concern with the second and third-highest interest among the farmers were 'the enactment of a law freezing the debt of farm households' and 'the deregulation of farmland transactions,' respectively.

On the question of investment and financing for agriculture, farmers asked for the expansion of investment on 'direct payments' (29.3%), 'farm village development' (13.7%), and 'development of non-farm income sources' (13.5%), while urban residents wished that the agricultural budget could be invested to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33.7%), 'raise the food self-sufficiency rate' (21.9%), and 'secure food safety' (19.1%).

On the government's pledge to deregulate farmland transactions, 73.2% of urban residents and 68.5% of farmers agreed while 26.7% of urban residents and 25.8% of farmers stood against i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one out of four respondents wished a careful approach to it.

Farmers chose the top-priority tasks of the new government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they are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agricultural damages derived from market opening' (47.4%),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income instability' (17.4%), and 'providing solutions to the urban-rural polarization' (15.0%).

Over half of the urban respondents (57.9%) said that the most serious problem facing rural Korea today is 'the hollowing of rural villages due to the ageing of rural population.' Other problems the urban residents were concerned about were 'failure of food supply,' 'environment destruction,' and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On the ratification of the Korea-U.S. FTA, a majority of farmers were against it while the opinions of urban residents were varied. Forty two point six percent of farmers and 31.9% of urban residents thought the bill should be

reexamined from scratch while 31.6% of urban residents and 24.2% of farmers thought that a referendum is needed to confront the issue. The ratios of respondents who thought the bill should be ratified as originally written were 36.5% for urban residents and 26.6% for farmers.

As for future trade negotiations such as Korea-China and Korea-EU FTAs, it was shown that more than 7 out of 10 people think the agricultural industry should not be damaged any further by trade negotiations. The opinion that 'the new government should protect agriculture' was expressed by 73.0% of urban residents and 76.8% of farmers.

The urban residents thought that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purchasing agricultural products, followed by 'quality' (taste) and 'country of origin' in that order; and 74.6% of urban residents thought the beef imported from the U.S. are not safe. The urban residents' trust on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was high as 86.5% of urban residents agreed that 'home-made agricultural products are safer than foreign products.'

Most of the urban respondents (85.8%) thought that agriculture is still important in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only 39.1%, a decline of 13.7% from last year, agreed to the additional tax payments to maintain the 'public-good'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Only about a half (45.9%) of the urban residents who had spent time in farm villages for tourism purposes expressed satisfaction from their sta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up a policy for attracting more urban visitors to the countryside by reinforcing the infrastructure for rural tourism, such as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and cleanliness which were shown to be unsatisfactory.

Researchers: Dong-Weon Kim and Hye-Jin Park
E-mail address: dongweon@krei.re.kr, frog78@krei.re.kr

차 례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 방법	2
3. 자료처리 및 분석	5

제2장 조사결과

1. 농업·농촌의 역할과 기능	6
2. 새정부에 대한 농정수요와 참여정부 농정평가	17
3. 농업개방과 대책에 대한 견해	29
4. 식품안전과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	37
5. 농업인의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의식변화	43
6. 농촌사회와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	56

제3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의견

1. 자유 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건의 요지	62
2.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65

제4장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66
2. 시사점	72

부록 1: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책건의 전문	74
-------------------------------	----

부록 2: 조사표(도시민, 농업인)	103
---------------------------	-----

참고 문헌	123
-------------	-----

표 차 례

제1장

표 1-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4
------	----	----------------	---

제2장

표 2-	1.	현재/미래 농업·농촌의 역할 인식	7
표 2-	2.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8
표 2-	3.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	9
표 2-	4.	도시민의 농업·농촌 긍정이미지 인식	10
표 2-	5.	도시민의 농업·농촌 부정이미지 인식	11
표 2-	6.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	12
표 2-	7.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도시민)	13
표 2-	8.	향후 농촌거주 구체적 시기	13
표 2-	9.	농촌 거주희망 이유	14
표 2-	10.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의향 반대 이유	16
표 2-	11.	농업이 축소되면 식량안보 기능이 약화된다는 의견 동의여부	16
표 2-	12.	새정부의 농업·농촌 기대	18
표 2-	13.	새정부가 제시한 농정공약 선호도(농업인)	19
표 2-	14.	농협 개혁 문제에 대한 의견	21
표 2-	15.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정도	22
표 2-	16.	농업관련 정보 입수 경로(중복응답)	23
표 2-	17.	농업·농촌 문제 체감도	23
표 2-	18.	최근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	24
표 2-	19.	농업·농촌·농업인 지원 체감도	25
표 2-	20.	정부의 농업·농촌·농업인 지원 부족 이유	25

표 2-21.	‘참여 정부’ 농정 5년 평가	26
표 2-22.	참여 정부가 추진한 주요 농정시책 부문별 평가	27
표 2-23.	119조원 투융자사업에 대한 인식	27
표 2-24.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인식	30
표 2-25.	새정부의 한·미 FTA 비준 처리 의견	31
표 2-26.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 방법	33
표 2-27.	농업·농촌 유지 발전 역할 책임	34
표 2-28.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시 농산물 구입 의향	36
표 2-29.	국산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역할	38
표 2-30.	2007년 농촌관광 횡수	40
표 2-31.	2007년 농촌관광 경험 만족도	41
표 2-32.	5년 전과 비교한 2007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44
표 2-33.	전년과 비교한 2007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44
표 2-34.	5년 전 비교 농촌생활수준 인식 연도별 변화('94-'07)	46
표 2-35.	2007년과 비교한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47
표 2-36.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48
표 2-37.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인	49
표 2-38.	농촌에서의 거주 여부	50
표 2-39.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연도별 변화(복수응답)	51
표 2-40.	농사와 관련한 애로 사항(복수응답)	53
표 2-41.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만족 정도	54
표 2-42.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94년~'07년)	55
표 2-43.	농업종사의 불만족 요인	56
표 2-44.	현 거주지에서 복지증진을 위한 우선 관심분야	57
표 2-45.	개인의 입장에서 정부의 최우선 복지분야	58
표 2-46.	농촌노인을 위한 최우선 복지서비스	58
표 2-47.	지역 공동체의식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	59
표 2-48.	농촌지역사회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복지정책	60

x

표 2-49. 마을에 외국인 며느리 거주 여부	60
표 2-50. 마을에 외국인 며느리 거주 수	61
표 2-51. 거주 외국인 며느리와의 의사소통 정도	61

제3장

표 3- 1. 농정 건의 요지 집계	63
---------------------------	----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소비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농업·농촌 문제(도시민)	12
그림 2-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가치 인식과 세금 부담 의향(도시민)	15
그림 2- 3. 새정부 출범 후 최우선 해결 농정현안 과제(농업인)	18
그림 2- 4. 새정부 농정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농업인)	20
그림 2- 5. 농지거래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견해(도시민)	21
그림 2- 6. 투융자사업 확대 선호 분야(농업인)	28
그림 2- 7. 향후 국가 통상협상에서 농업문제의 접근 방식	32
그림 2- 8. 농산물 시장개방 관련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33
그림 2- 9.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의견(도시민)	35
그림 2-10. 농업예산 지원 우선순위/ 1순위(도시민)	37
그림 2-11. 농축산물 구입시 우선순위(도시민)	39
그림 2-12.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인식(도시민)	40
그림 2-13. 농업·농촌 관련 여가활동/관광여행 시 불편사항(도시민)	42
그림 2-14. 가장 해보고 싶은 농촌활동	42
그림 2-15. 과거와 비교한 현재(2007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45
그림 2-16. 5년 전과 5년 후 농촌 생활수준 인식과 기대 변화	48
그림 2-17. 농사와 관련한 주요 관심 사항 변화	52
그림 2-18. UR출범 이후 농사만족도 변화 추이(만족 응답)	55

제 1 장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978년 개원 이래 현지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이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2007년도 조사는 2006년에 이어 조사대상을 도시민까지 포함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로 실시하였고, 참여정부 농정 5년을 평가하고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 등을 조사함.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개방화 시대에 정부의 농정 방향과 기조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달라진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농업정책 연구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음.

2. 조사 방법

1.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 조사는 2008년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852건 회수)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면접조사를, 농업인은 자체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
- 도시민의 경우, 전국 도시지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농촌 및 농업관련 종사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크기는 1,500명으로 전국 인구비례에 따른 비례할당표본추출을 실시하였고,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3\%$ 이었음.
- 농업인의 경우,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852건(유효응답률 42.6%)의 조사표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1.2. 조사 문항 구성

- 조사문항은 농업인 의식 변화,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 농업·농촌 가치 인식, 농업개방과 대책에 대한 견해, 농업에 대한 기대와 요구, 식품안전과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 등 도시민과 농업인 공통문항 16문항과 농업인 37문항, 도시민 33문항으로 설계하였음.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도시민의 지역별 분포는 광역도시 거주자가 49.3%, 중소도시 거주자가 50.7%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생산직 22.8%, 주부 19.1%, 사무직 15.5%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음.
- 농업인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57.3%로 집계되었고, 경작 규모는 1.5ha 이상이 59.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학력별 분포는 중졸(29.6%)과 고졸(43.7%)이 대다수였고, 대졸(퇴) 이상도 9.5%(81명)가 응답하였음.¹⁾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농촌에서 독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지역 농·축·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지역별 분포나 경작규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표 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도시민(N=1,500)		농업인(N=852)	
구 분	빈 도(%)	구 분	빈 도(%)
성별		연령별	
남 자	744(49.6)	60세 미만	324(38.0)
여 자	756(50.4)	60세 이상	505(57.3)
연령별		모름/무응답	23(2.7)
20 대	355(23.7)	학력별	
30 대	358(23.9)	초 졸 이하	131(15.4)
40 대	357(23.8)	중 졸	252(29.6)
50 대 이상	430(28.7)	고 졸	372(43.7)
학력별		대졸(퇴)이상	81(9.5)
초등졸 이하	79(5.3)	모름/무응답	16(1.9)
중 졸	156(10.4)	주재배작목	
고 졸	684(45.6)	수 도 작	395(46.4)
대 재 이 상	581(38.7)	과 수	115(13.5)
직업별		노지채소	44(5.2)
사 무 직	232(15.5)	축 산	103(12.1)
생 산 직	342(22.8)	시설원예	81(9.5)
자 영 업	416(27.7)	특 작	67(7.9)
주 부	286(19.1)	기 타	22(2.6)
학 생	136(9.1)	모름/무응답	25(2.9)
무직 / 기 타	88(5.9)	연평균 소득	
지역규모별		2천만원 미만	524(61.5)
광 역 도 시	740(49.3)	2천만원 이상	310(36.4)
중 소 도 시	760(50.7)	모름/무응답	18(2.1)
월평균 소득별		경작규모	
150만원 미만	207(13.8)	1.5ha 미만	326(38.3)
150~249만원	409(27.3)	1.5ha 이상	505(59.3)
250~349만원	484(32.3)	모름/무응답	21(2.5)
350~449만원	229(15.3)	영농경력	
450만원 이상	153(10.2)	20년 미만	19(2.2)
모름/ 무응답	18(1.2)	20년 이상	803(94.3)
농촌거주 경험		모름/무응답	30(3.5)
있음	842(56.1)		
없음	658(43.9)		
농업인 가족별			
있음	456(30.4)		
없음	1,044(69.6)		

3. 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편집→부호화→정제 과정을 거쳐 통계프로그램인 SAS 및 SPSS를 이용하여 기초 통계처리 하였음.
- 도시민과 농업인 공통문항 중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를 빈도 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항을 종속변수로, 응답자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해 계층 간 인식을 비교하였음.
- 또한, 이번 조사 결과와 '94년 이후 조사 결과를 일부 대비하여 연도별 의식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음.

제 2 장

조 사 결 과

1. 농업·농촌의 역할과 기능

-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현재 또는 앞으로 농업·농촌의 중요해질 역할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 농업·농촌과 관련된 견해와 의식을 파악하였음.
- 또한, 도시민에게는 농업·농촌의 이미지,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의 가치 및 이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비용 추가부담 의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1.1. 농업·농촌 역할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가장 많이 꼽아

-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해 도시민은 현재와 미래 모두 ‘식량의 안정적 공급’(현재 42.6%, 미래 26.4%), ‘자연환경 보전’(현재 21.3%, 미래 19.5%)을 가장 중요해질 역할로 꼽았으며, 다음 순으로 ‘국토의 균형발전’(현재 17.5%), ‘전원생활의 공간’(미래 15.0%)이라고 응답하였음.

- 농업인은 현재의 농업·농촌 역할 중 ‘식량의 안정적 공급’(41.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연환경 보전’(24.1%), ‘국토의 균형발전’(15.8%) 순으로 응답하였음.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로는 ‘자연환경 보전’(20.3%), ‘식량의 안정적 공급’(16.8), ‘전원생활의 공간’(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도시민이나 농업인 모두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역할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꼽는데 일치했고, 그 다음 중요한 역할로 ‘자연환경 보전’을 꼽는데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유사한 견해를 보임.

표 2-1. 현재/미래 농업·농촌의 역할 인식

단위: 명, %

구 분	현 재				미 래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식량의 안정적 공급	1,279	42.6	705	41.4	791	26.4	287	16.8
국토의 균형발전	525	17.5	270	15.8	440	14.7	242	14.2
자연환경 보전	640	21.3	410	24.1	585	19.5	345	20.3
전통문화의 계승	199	6.6	49	2.9	340	11.3	145	8.5
관광 및 휴식의 장소	101	3.4	36	2.1	382	12.7	202	11.8
전원생활의 공간	248	8.3	88	5.2	449	15.0	252	14.8
기 타	2	0.1	2	0.1	2	0.1	5	0.3
모름/무응답	6	0.2	144	8.5	11	0.4	226	13.3
계	3,000	100.0	1,704	100.0	3,000	100.0	1,704	100.0

1.2. 농업·농촌 발전 가능성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긍정적 전망

- 농업·농촌 역할과 가치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10개 문항을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동시에 질문한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이 농업인은 6개 항목, 도시민은 4개 항목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 중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는데 동의하는 비중이 도시민(63.0%)과 농업인(85.7%) 간에 가장 큰 차이(22.7%p)를 보였으며,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농가소득을 보상해줘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도시민은 77.7%, 농업인은 94.5%가 동의해 인식차이(16.8%p)가 크게 나타남.
- 한편, ‘농업·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동의한 도시민은 35.8%, 농업인은 19.6%로 16.2%p의 차이를 보였으며,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 있다’는 항목에도 도시민 35.2%, 농업인 26.6%가 동의해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농업 발전 가능성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음.
- 이 같은 이유로 ‘자녀가 원하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응답도 도시민 45.7%, 농업인 39.6%로 나타났으며, ‘우리 농산물이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는 항목은 도시민(86.5%)이 농업인보다(85.3%) 다소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음.

표 2-2.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단위: %

구 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초중고 과정에 농촌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	73.9	81.9	26.1	15.5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79.1	90.0	20.9	8.2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45.7	39.6	54.3	57.9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여해 온 바가 크다	79.1	81.8	20.9	16.2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35.8	19.6	64.2	77.6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있다	35.2	26.6	64.6	70.3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63.0	85.7	36.9	12.3
우리나라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86.5	85.3	13.4	12.4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한다	16.0	19.1	83.9	77.7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다	49.5	60.2	50.5	37.2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가 농가소득 보상해 주어야 한다	77.7	94.5	22.2	4.3

* 무응답/모름은 제외

- 도시민들이 ‘자녀가 원하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응답비율은 2004년 조사결과²⁾ 37.5%보다 다소 증가한 45.7%로 나타났으나, 조사표본과 조사방식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증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3.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국민 10명중 8명은 공감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에 대하여 ‘지금까지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에 도시민과 농업인(각 77.5%, 63.7%) 모두 가장 많이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재와 미래의 농업이 가진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도시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9.3%)이라는 응답이, 농업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17.0%)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2-3.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

단위: 명, %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1,162	77.5	543	63.7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125	8.3	145	17.0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32	2.1	72	8.5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140	9.3	82	9.6
관심있게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41	2.7	-	-
모름/무응답	-	-	10	1.2
계	1,500	100.0	852	100.0

2) ‘농업·농촌 다원적기능 국민의식조사’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자연환경은 긍정 이미지, 문화·복지 낙후 부정 이미지

- 도시민들은 농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긍정적 이미지로 31.3%가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 ‘인정이 풍부하고 전통적 풍속이 남아있는 곳(23.8%)’, ‘전원주택, 전원생활 가능한 곳(19.4%)’, ‘노후 생활에 적합한 곳(18.7%)’ 등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이미지는 20대(40.6%), 학생(43.4%)에게서 높게 나타남. ‘인정이 풍부하고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는 50대 이상(27.2%)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 도시민의 농업·농촌 긍정이미지 인식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	291	19.4
노후의 생활에 적합한 곳	280	18.7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	470	31.3
재해를 막고 수원을 지키는 기능이 있는 곳	96	6.4
인정이 풍부하고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있는 곳	357	23.8
기 타	6	0.4
계	1,500	100.0

- 농촌에 대해 떠오르는 부정적 이미지로는 응답자의 49.2%가 ‘문화, 보건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을 꼽았음.
- 다음으로는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23.0%)’, ‘가난하고 힘들어 비전이 없는 곳(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는 5.0%에 그쳐 환경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지 않았음.

표 2-5. 도시민의 농업·농촌 부정이미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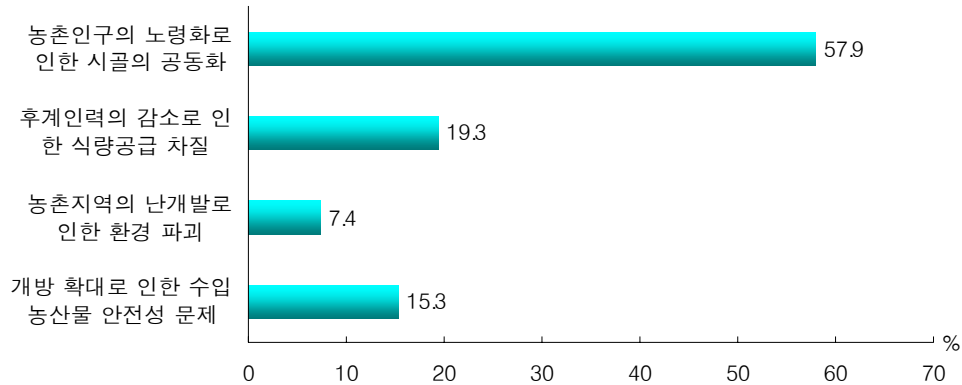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345	23.0
문화, 보건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	738	49.2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곳	75	5.0
자연재해와 병충해가 되풀이 되는 곳	47	3.1
가난하고 힘들어 비전이 없는 곳	286	19.1
기 타	9	0.6
계	1,500	100.0

1.5. 도시민, 소비자 입장에서 '농촌의 공동화' 가장 우려해

- 농산물을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 현재 농업·농촌의 문제로 응답자의 57.9%가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시골 공동화' 우려 의견은 지역별로 광주/전라 (74.4%)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밖에 '식량공급 차질', '농산물 안전성' 등을 우려하는 문제로 꼽은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이 잘 유지되어 소비자로서 안전한 식량공급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됨.

그림 2-1. 소비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농업·농촌 문제(도시민)



1.6. 도시민 63.7%,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되면 농촌에 거주하고 싶다”

-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49.3%(살기 어려울 것 39.1%, 훨씬 살기 어려울 것 10.2%)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현재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이라는 응답은 긍정적인 전망의 절반정도인 25.8%로 나타남.
-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서울(31.8%), 지역규모별로는 광역도시(29.9%)에서 높게 나타남.

표 2-6.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현재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	98	6.5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290	19.3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373	24.9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다	586	39.1
현재보다 훨씬 살기 어려울 것이다	153	10.2
계	1,500	100.0

- 은퇴나 기타 여건이 되는 경우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63.7%의 응답자가 ‘있다(매우 16.1%, 조금 47.6%)’고 응답함.
- ‘향후 농촌거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대구/경북(73.1%) 지역과 자영업자(70.4%)에서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학생(54.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7.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도시민)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많다	242	16.1
조금 있다	714	47.6
별로 없다	351	23.4
전혀 없다	193	12.9
계	1,500	100.0

- 향후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956)를 대상으로 구체적 실천시기를 물어본 결과, 43.8%가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응답함.
- ‘10년 이후’라는 응답은 대구/경북(51.3%), 40대(50.6%), 농촌거주 경험자(41.7%), 농업인 가족이 있는 경우(4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8. 향후 농촌거주 구체적 시기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3년 내	23	2.4
5년 내	29	3.0
7년 내	24	2.5
10년 내	83	8.7
10년 이후	378	39.5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419	43.8
계	956	100.0

- 향후 농촌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는 농촌거주 희망자(N=956)의 57.5%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라고 응답해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가장 많이 꼽은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31.3%)’과 연관성을 보임.
- 다음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22.1%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뒤를 이었음.
-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서울(49.2%)에서는 낮게, 대전/충청(66.0%)에서는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2-9. 농촌 거주희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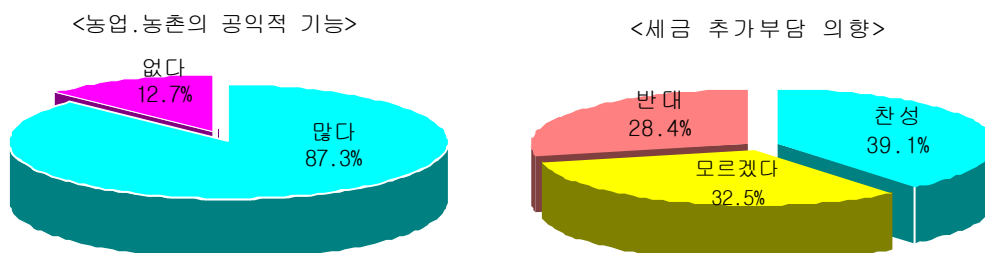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42	4.4
농업을 경영해 안전한 농산물을 자급하기 위해	34	3.6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550	57.5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29	3.0
경로사상과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26	2.7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211	22.1
땅값과 생활비가 도시보다 싸므로 여유있게 살수 있어서	63	6.6
기 타	1	0.1
계	1,500	100.0

1.7. 농촌 공익기능 유지 세금부담 의향 1년새 13.7%p 줄어

- 농업·농촌이 가진 1차적인 기능인 먹거리 생산 이외의 사회·문화적 공익 기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도시민들(87.3%)이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없다’는 응답은 12.7%로 낮게 나타나 공익기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2-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가치 인식과 세금 부담 의향(도시민)



- 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찬성 39.1%, 반대 28.4%, 유보적 의견이 32.5%로 나타나 다양한 견해가 있었음. 세금부담에 찬성하는 비율(39.1%)은 전년보다 13.7%p나 감소하였음.
-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의 가치평가에 비해 ‘반대’(28.4%)의 의견이 다소 높아져 응답자가 직접 개입되는 경우에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임.
- 공익기능을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중소도시(41.8%), 남성(44.5%), 화이트칼라(46.6%), 농촌거주경험자(43.6%), 농업인 가족(44.3%)인 경우 높게 나타남.
-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세금 추가부담을 반대하는 응답자(N=425)의 59.1%는 그 이유로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음.
- 다음으로 ‘농촌 관련자가 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18.8%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타 의견 중 낭비되는 세금 절약으로(2.1%),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1.9%), 불투명한 세금집행 우려(1.2%) 등의 세금의 집행 문제를 지적한 의견이 다소 나타남.

-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광주/전라(77.3%), 여성(64.2%), 50대 이상(66.4%), 주부(64.5%), 월평균가구소득 150만원 미만(84.4%), 농촌거주 경험자(63.8%)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0.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의향 반대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13	3.1
농촌과 관련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보전해야 하므로	80	18.8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51	59.1
농촌의 환경 및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보전되어지므로	41	9.6
기타	40	9.4
계	425	100.0

- 농업 축소로 인한 ‘식량안보 기능’ 약화에 대해 82.9%가 동의를 하여 식량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에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와 미래 농업의 역할 중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과 국가경제의 관계 동의 비율 등과 비교해볼 때 응답의 일관성이 보임.
- ‘동의한다’는 의견은 제주/강원(75.0%), 블루칼라(78.7%), 월평균가구소득 450만원 이상(75.8%) 응답자에게서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2-11. 농업이 축소되면 식량안보 기능이 약화된다는 의견 동의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동의한다	1,244	82.9
동의하지 않는다	255	17.0
모름/무응답	1	0.1
계	1,500	100.0

2. 새정부에 대한 농정수요와 참여정부 농정평가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된 조사인 점을 감안해 새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할 농정현안 대책과, 집권기간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음.
- 이와 함께 농업인에게는 지난 5년간 추진된 ‘참여정부 농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투융자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살펴봄으로써 새정부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음.

2.1. 농업인, 새정부 최우선 농정과제로 ‘개방 피해대책’ 꼽아

- 이 조사가 실시된 직후 새정부가 출범함을 의식해 도시민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새정부가 농업·농촌문제를 어느 정도 잘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정도를 파악하였음.
- 도시민과 농업인은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각자의 입장에서 새정부가 농업·농촌문제를 앞으로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도시민 45.3%, 농업인 69.0%)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한다는 응답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의 2~3배에 달하였음.
-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감은 도시민보다 농업인이 23.7%p나 높게 나타나, 농업인들이 도시민보다 상대적으로 새정부 농업정책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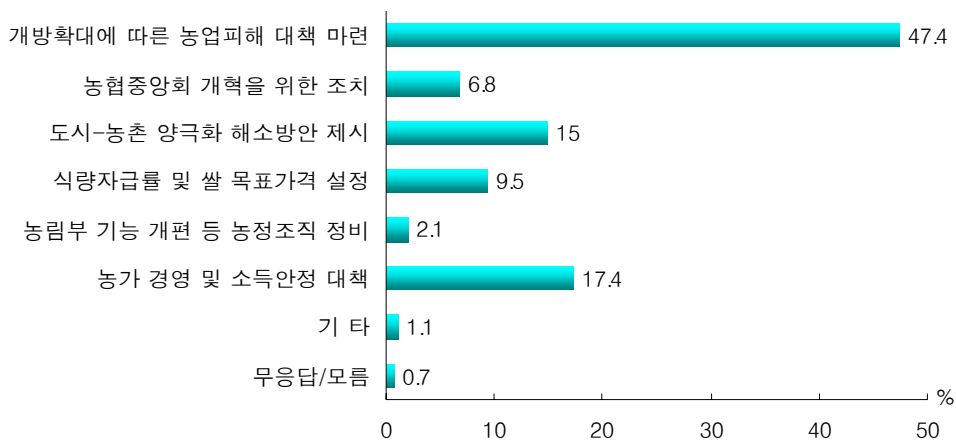
표 2-12. 새정부의 농업·농촌 기대

단위: 명, %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매우 기대가 크다	127	8.5	171	20.1
기대하는 편이다	552	36.8	417	48.9
보통이다	507	33.8	107	12.6
기대가 작은 편이다	253	16.9	102	12.0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61	4.1	48	5.6
모름/무응답	-	-	7	0.8
계	1,500	100.0	852	100.0

- 농업인들은 새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농업분야 현안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마련’을 가장 많이(47.4%) 꼽았음.
- 다음으로는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대책’(17.4%), ‘도시-농촌 양극화 해소방안 제시’(15.0%), ‘식량자급률 및 쌀 목표가격 설정’(9.5%),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조치’(6.8%), ‘농림부 기능 개편 등 농정조직 정비’(2.1%)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 새정부 출범 후 최우선 해결 농정현안 과제(농업인)



2.2. 새정부 농정공약 중 농업인 최대 관심사는 ‘소득보전특별법’

- 새정부가 제시한 농정공약 중 관심과 기대가 가장 큰 공약으로는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제정’을 월등히 높게 1순위로 꼽았음.
-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순으로 꼽았음. 농업인들의 관심은 대체로 소득과 관련된 직접 보상 성격의 공약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반면에 ‘남북농업협력’, ‘수출 농식품기업과 지역기반 농기업 집중육성’, ‘농업회의소 설치’ 등 농업인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분야는 관심과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표 2-13. 새정부가 제시한 농정공약 선호도(농업인)

구 분	순 위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	1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농가부채동결법’ 제정	2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해 농지의 주인을 도시인까지 확대	3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도	4
농업인의 기초생활 보장,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보장	5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위해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전환	6
농촌지역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조성 등 농촌지역 교육여건 확충	7
농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농정협의체인 ‘농업회의소’ 설치	8
수출 농식품기업과 지역기반 농기업 집중 육성	9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남북농업협력기금 조성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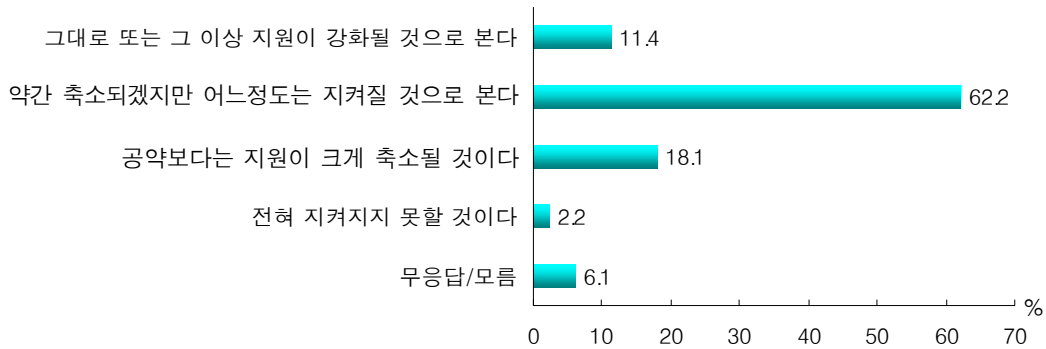
※ 가중합(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이용하여 순위매김 하였음.

- 농업인 73.6%는 새정부가 제시한 농정공약들이 당선자의 성향, 공약 내용의 구체성 등을 감안할 때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그중 ‘공약 그

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지원이 강화될 것' 이란 기대도 11.4%에 달해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공약보다 지원이 크게 축소되거나(18.1%), 전혀 지켜지지 못할 것(2.2%) 이란 의견도 20% 선으로 집계되어 우려하는 인식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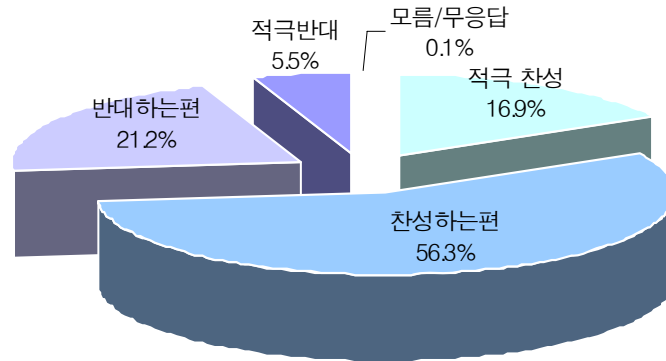
그림 2-4. 새정부 농정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농업인)



2.3. '농지거래 규제 완화' 도시민 73.2%, 농업인 68.5% 찬성

- 새정부의 공약 중 농지거래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도시민 73.2%가 '찬성(적극 16.9%, 찬성하는 편 56.3%)'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냄.
- 농업인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에 대해 68.5%가 찬성해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정책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음. 하지만 농업인 중에서 반대 의견(15.7%)과 판단을 유보한 응답(10.1%)까지 더하면 25.8%가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2-5. 농지거래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견해(도시민)



- 새정부가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 권한축소, 조직의 슬림화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 개혁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도시민과 농업인 각 62.1%와 59.5% 등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함.
- ‘자발적인 개혁 유도’ 의견도 도시민 34.3%, 농업인 30.7%로 다소 높았으나, ‘정부 불간섭’이 도시민 3.6%, 농업인 3.4%로 매우 낮게 나타나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4. 농협 개혁 문제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931	62.1	507	59.5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515	34.3	262	30.7
정부가 전혀 간섭할 필요가 없다	54	3.6	29	3.4
무응답/모름	-	-	54	6.3
계	1,500	100.0	852	100.0

2.4. 도시민 51.6%, ‘평소 농업·농촌문제 관심을 갖고 있다’

- 평소 농업정책이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과반수(51.6%) 정도로 응답해 중요성 체감에 비해 평소 관심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관심이 ‘있다’는 의견은 대구/경북(61.9%), 중소도시(54.3%), 남성(56.7%), 농촌거주경험자(61.8%), 농업인 가족(65.8%)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 수록 관심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2-15. 평소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많다	131	8.7
대체로 많은 편이다	643	42.9
별로 없다	671	44.7
전혀 없다	55	3.7
계	1,500	100.0

- 평소 농업정책이나 관련 정보를 얻는 매체로 ‘TV’가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앙일간지(신문)’가 22.3%, ‘인터넷’이 11.8%로 뒤를 이었음(중복응답 기준).
- ‘전문지(1.5%)’나 ‘정책 홍보물(2.2%)’이라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나 도시민이 농업 관련 정보를 접하는 매체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 일간지(신문)’를 꼽은 응답자는 지역별로는 광주/전라(25.0%), 20대(32.4%), 학생(26.5%), 150만원 미만 소득자(30.9%)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16. 농업관련 정보 입수 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TV	1,431	49.9
라디오	186	6.5
중앙일간지(신문)	640	22.3
농업관련 전문지	42	1.5
잡지	32	1.1
인터넷	340	11.8
정책 홍보물	63	2.2
기타	135	4.7
계	2,869	100.0

* 무응답/모름 = 131

- 응답자가 체감하는 자신과 농업·농촌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다(매우 8.3%, 대체로 40.9%)’는 의견이 49.2%로 응답해 ‘없다(별로 39.7%, 전혀 5.9%)’는 의견 45.6%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 ‘많다’는 응답은 중소도시(53.3%), 농촌거주경험자(58.9%), 농업인가족(63.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다’는 비율이 높아짐.

표 2-17. 농업·농촌 문제 체감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매우 많다	125	8.3
대체로 많은 편이다	614	40.9
별로 관계없다	595	39.7
전혀 관계가 없다	88	5.9
잘 모르겠다	78	5.2
계	1,500	100.0

2.5. 도시민, 최근 가장 관심 많은 분야 'FTA 등 국제협상' 꼽아

-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FTA 등 국제협상'이 2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식품 안전성(18.7%)',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17.2%)' 등이 뒤를 이어 국제협상과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됨.
- 최근 TV를 비롯한 언론매체를 통해 한-미 FTA를 비롯한 국제협상 문제가 자주 보도되는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농식품 안전성(18.7%)'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17.2%)' 문제를 먹거리에 대한 안전문제로 관련시켜 살펴볼 경우에는 그 비율이 35.9%로 높아짐.
- 'FTA 등 국제협상' 응답은 남성(29.8%), 학생(51.5%), 농촌거주경험자(30.5%), 농업인비가족(27.1%)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연령이 낮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통상문제의 관심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2-18. 최근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

구 분	빈 도	단위: 명, %
		비 율
농촌복지	129	8.6
농식품 안전성	281	18.7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258	17.2
FTA 등 국제협상	365	24.3
농산물 가격	239	15.9
농가 소득안정	165	11.0
농업인 교육	8	0.5
수질 및 토양오염 등 농업환경	53	3.5
기타	2	0.1
계	1,500	100.0

- 정부가 기울이는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는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해 ‘불충분하다’(매우 포함)는 의견이 78.6%로 나타남.
- ‘불충분하다’는 의견은 광주/전라(86.3%), 여성(81.5%)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9. 농업·농촌·농업인 지원 체감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충분하다	20	1.3
충분한 편이다	301	20.1
불충분하다	1,035	69.0
매우 불충분하다	144	9.6
계	1,500	100.0

-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응답자(N=1,179)들은 그 이유로 ‘국가 전체경제에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를 33.8%로 가장 많이 꼽았음.
- ‘국가전체 경제에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화이트칼라 응답자(38.5%)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0. 정부의 농업·농촌·농업인 지원 부족 이유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국가 전체경제에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399	33.8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289	24.5
국민들의 관심이나 관계가 적기 때문에	262	22.2
농업계외 정치력이 작기 때문에	220	18.7
기타	9	0.8
계	1,179	100.0

2.6. 농업인의 과반수 ‘참여정부 농정 기대 못미쳐’

- ‘참여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농정에 대해 농업인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잘했다’(매우, 대체로)는 응답 비율이 6.4%에 그친 반면, ‘못했다’(매우, 대체로)는 응답은 과반수가 넘는(54.7%) 것으로 집계됨.
- 이를 ‘국민의 정부’ 집권기간이 끝나가는 2002년 12월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당시에 ‘잘했다’ 6.6%, ‘못했다’ 66.1%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농업정책 평가는 6%대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1. ‘참여정부’ 농정 5년 평가

구 분	단위: 명, %	
	빈 도	비 율
매우 잘했다	10	1.2
대체로 잘했다	44	5.2
보통이다	279	32.8
대체로 잘 못했다	310	36.4
매우 잘 못했다	156	18.3
모름/무응답	53	6.2
계	852	100.0

- ‘참여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9개의 주요 농업정책 부문별 평가를 가중 평균 값(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에서는, 직불제 확대 등 소득안정 대책을 가장 높게 평가(3.5점)해 경영안정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밖에 이력추적제 등 농식품 안전성 강화(3.4점), 우수브랜드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3.3점) 등이 높게 평가받은 분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한-미 FTA와 쌀협상 피해대책(2.2점), 추곡수매제 폐지 등 쌀산업 체질 강화(2.3점) 등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분야로 분류되었음.

표 2-22. 참여정부가 추진한 주요 농정시책 부문별 평가

단위: %

구 분	매우 잘함	대체로 잘함	보통	대체로 못함	매우 못함	평균(점)
추곡수매제 폐지 등 쌀산업 체질 강화	18	86	30.6	34.6	24.4	2.3
농지은행제 도입	8.3	32.4	37.7	16.8	4.8	3.2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5.7	21.8	37.6	25.5	9.4	2.9
직불제 확대 등 소득 및 경영 안정	15.2	36.8	33.5	11.5	3.0	3.5
우수브랜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8.5	34.0	40.9	13.6	3.0	3.3
이력추적제 등 농식품 안전성 강화	11.0	35.0	38.3	13.1	2.5	3.4
복지, 교육, 지역개발 확충	6.3	19.2	39.2	28.0	7.3	2.9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	7.3	24.0	41.7	21.0	6.1	3.1
한-미 FTA, 쌀협상 피해 대책	4.2	7.0	21.5	36.1	31.2	2.2

- 119조원 투융자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효과가 있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20.6%인 반면, ‘효과가 없다’(적은편 포함)는 응답이 2배를 넘는 54.4%로 집계되어 119조원 투융자 사업에 대한 현장 농업인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분석됨.
- 이같은 반응을 종합하면 직불제 등 소득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추곡수매제 폐지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책은 평가가 뚜렷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2-23. 119조원 투융자사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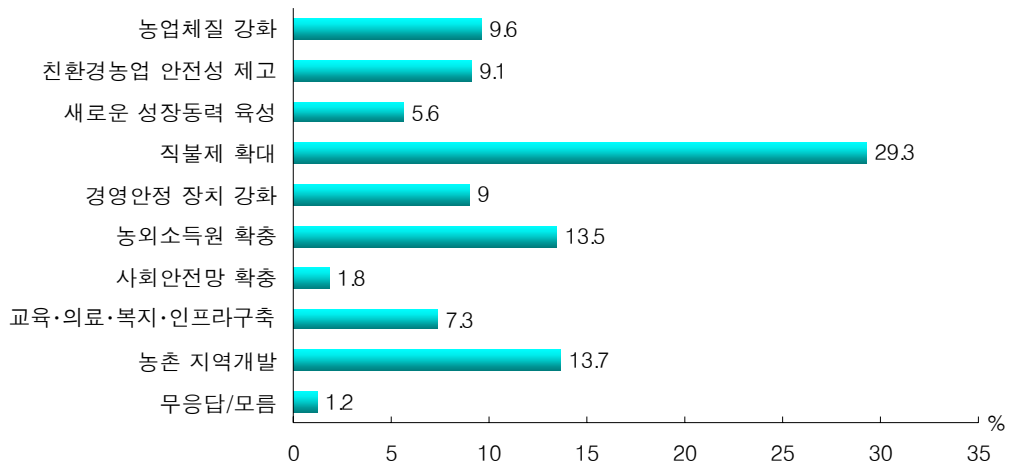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효과가 크다	18	2.1
효과가 있다	158	18.5
보통이다	185	21.7
효과가 적은 편이다	306	35.9
효과가 없다	158	18.5
모름/무응답	27	3.2
계	852	100.0

2.7. 투융자사업 확대분야로 ‘직접지불제’ 가장 많이 꼽아

- 농업인들은 투융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개 주요사업에 대해 확대되기를 원하는 분야로 ‘직불제 확대’를 가장 많이(29.3%)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촌 지역개발’(13.7%), ‘농외소득원 확충’(13.5%) 순으로 선호하였음.
- 반면, ‘사회 안전망 확충’(1.8%),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5.6%) 등 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분야는 선호도가 낮았음.

그림 2-6. 투융자사업 확대 선호 분야(농업인)



3. 농업개방과 대책에 대한 견해

- 농업개방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의식을 살펴보고,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피해보상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였음.
-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비준 문제와 향후 통상정책에서 농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을 질문하여 향후 통상정책시 참고가 되도록 하였음.

3.1. 도시민 54.1%, 농업인 60.0% ‘농산물 시장개방 최소화해야’

- 도시민들은 현재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인 54.1%(적극적 반대 17.3%, 수입 최소화 36.8%)로 나타남.
- 하지만 ‘농산물 시장개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의견도 36.5%로 집계되어 향후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개방 확대 찬성’ 의견은 450만원 이상 소득자(54.9%), 비농업인가족(47.9%)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41.3%)층에서는 ‘개방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농업인도 60.0%가 시장 추가개방에 반대했으며,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거나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33.7%로 집계되어 도시민보다 좀더 시장개방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았음.

표 2-24.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더 이상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안된다	260	17.3	134	15.7
국내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552	36.8	377	44.3
농산물 시장개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547	36.5	258	30.3
농산물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140	9.3	29	3.4
모름/무응답	1	0.1	54	6.3
계	1,500	100.0	852	100.0

3.2. 한-미 FTA 비준, ‘다양한 시각차이’ 존재

- 한-미 FTA 비준의 과제를 안은 새정부가 비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물어본 결과, 도시민들은 ‘원안대로 국회 비준 노력(36.5%)’, ‘비준 원점에서 재검토(31.9%)’, ‘국민투표로 결정(31.6%)’ 등 세 가지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음.
- 직접적인 당사자인 농업인들의 의견도 반대의견이 우세한 가운데(원점에서 재검토 42.6%, 국민투표로 결정 24.2%), ‘원안대로 국회 비준 노력’도 26.6%가 찬성하여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시민 중 ‘원안대로 국회 비준’ 의견은 대구/경북(43.8%), 광역도시(39.3%), 남성(42.1%), 자영업자(41.3%)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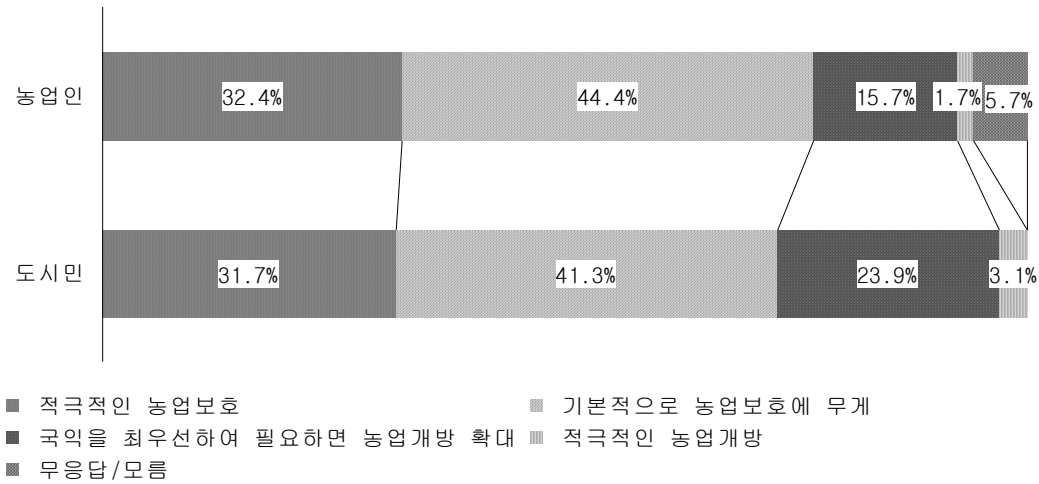
표 2-25. 새정부의 한·미 FTA 비준 처리 의견

단위: 명, %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원안대로 국회에서 비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47	36.5	227	26.6
비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478	31.9	363	42.6
국회 비준보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474	31.6	206	24.2
모름/무응답	1	0.1	56	6.6
계	1,500	100.0	852	100.0

- 현재 협상이 논의되고 있는 한-중, 한-EU FTA와 향후의 통상협상에서 ‘새 정부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시민 73.0%, 농업인이 76.8%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가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도시민 중에는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23.9%가 찬성하고 있고, 여기에 적극적인 개방 의견까지 포함하면 27.0%가 개방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농업인은 17.4%) 여전히 농업인과 시각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도시민 중 ‘농업 보호’ 의견은 제주/강원(83.8%), 중소도시(75.7%), 여성(77.5%), 화이트칼라(77.2%), 주부(76.6%), 농업인가족(77.2%)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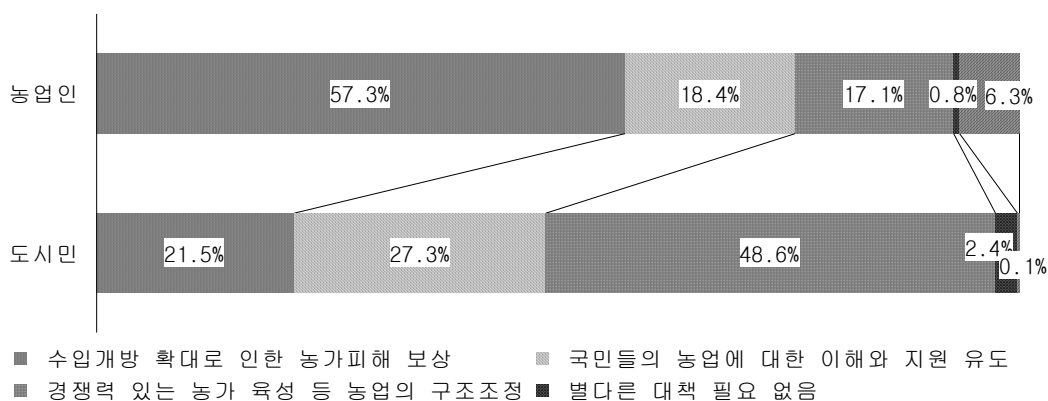
그림 2-7. 향후 국가 통상협상에서 농업문제의 접근 방식



3.3. 농산물 시장개방 정부 역할 도시민-농업인 ‘시각차 뚜렷’

-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시민은 48.6%가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 등 농업 구조조정’을 꼽은 반면에 농업인은 57.3%가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을 꼽아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음.
- 다음으로 도시민은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유도’(27.3%),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피해 보상’(21.5%)을 꼽은 반면에 농업인은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유도’(18.4%),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 등 농업의 구조조정’(17.1%)을 꼽았음.
- 도시민 중 ‘농업 구조조정’ 의견은 부산/경남/울산(61.2%), 화이트칼라(54.7%), 학생(55.9%), 비농업인가족(51.1%)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응답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2-8. 농산물 시장개방 관련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 시장개방에 따르는 농가의 피해보상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민은 과반수 (50.7%)가 ‘정부가 다른 품목으로 전환 지원 등 간접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과반수에 가까운(44.7%) 농업인은 ‘정부가 피해액을 직접 보상해야 한다’고 응답해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였음.
- 수혜를 보는 소비자 또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도 도시민은 15.9%, 농업인은 25.6%로 차이를 보였으며,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도 도시민은 9.5%가, 농업인은 2.5%가 동의하는 등 인식차이가 나타남.

표 2-26.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 방법

단위 : 명, %

구분	도시민		농업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부가 피해액을 직접 보상해야 한다	349	23.3	381	44.7
정부가 다른 품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간접 보상해야 한다	760	50.7	172	20.2
시장에 따라 수혜를 보는 소비자 또는 기업이 보상해야 한다	239	15.9	218	25.6
수혜든 피해든 일반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	143	9.5	21	2.5
기타	9	0.6	3	0.3
모름/무응답	-	-	57	6.7
계	1,500	100.0	852	100.0

- 현재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속에서 농업과 농촌을 유지/발전시킬 주체에 대해서는 도시민 54.6%, 농업인 64.5% 등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정부, 관련 기관’을 꼽았음.
- 하지만 도시민 30.1%가 ‘농업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농업인 스스로는 18.9%만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시민 중 ‘정부, 관련 기관’이라는 응답은 대전/충청(62.3%), 주부(59.1%)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음.

표 2-27. 농업·농촌 유지 발전 역할 책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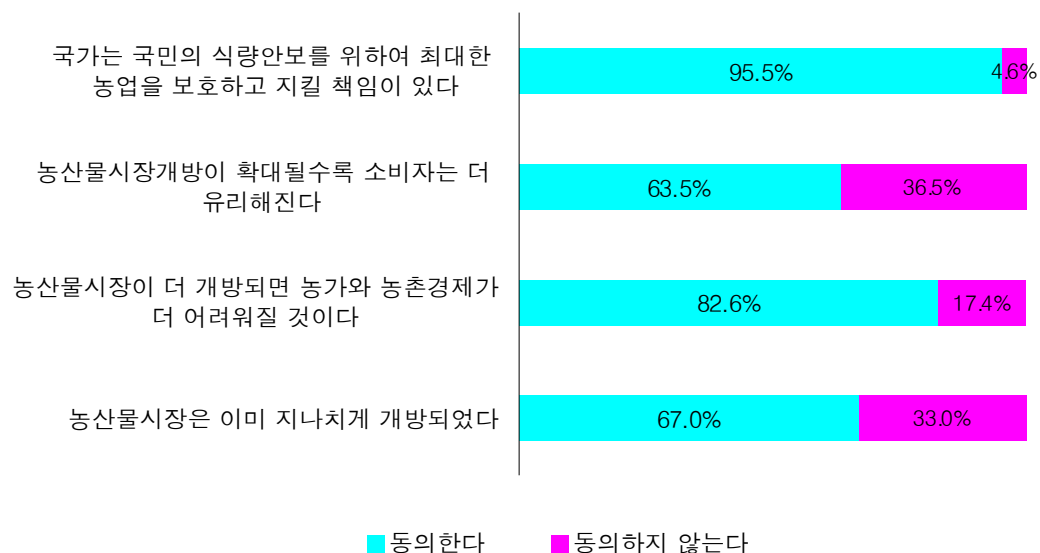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농업인	452	30.1	161	18.9
정부, 관련 기관	819	54.6	550	64.5
소비자(납세자)	181	12.1	67	7.9
관련 학계	19	1.3	6	0.7
언론	24	1.6	13	1.5
기타	5	0.3	2	0.2
모름/무응답	-	-	53	6.2
계	1,500	100.0	852	100.0

3.4. 도시민 63.5%, “농산물 시장개방 소비자에게 유리”

-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네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시장개방을 우려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산물 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 동의 67.0%, ‘더 개방되면 농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동의 82.6%, ‘국가는 식량안보를 위해 최대한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동의 95.5% 등으로 집계되었음.

-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더 유리해진다’는 의견에는 63.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결과적으로 개방하면 소비자에게 도움이되지만,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2-9.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의견(도시민)



- 도시민에게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 확대될 경우 농산물 구입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46.3%가 ‘산지에 관계없이 안전성을 포함한 품질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해 실리 중심으로 구매할 뜻을 비쳤음.
- ‘가격경쟁력이 있을 경우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도 19.9%로 나타나 국내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음.
- 반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은 33.7%로 2006년 조사결과인 36.0%보다 다소 낮아졌음.

-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충성도 높은 소비자는 중소도시(36.8%), 50대 이상(40.5%), 농촌거주경험자(36.1%), 농업인가족(39.5%)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2-28.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시 농산물 구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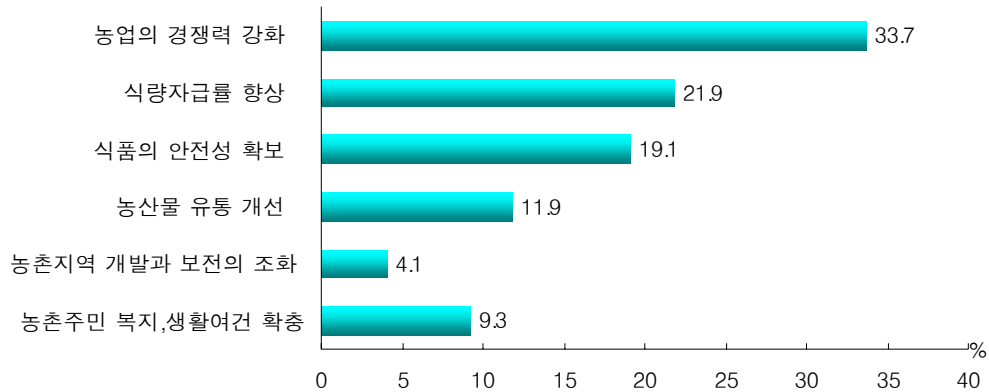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505	33.7
우리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298	19.9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694	46.3
기타	3	0.2
계	1,500	100.0

3.5. 도시민, 농업예산 ‘경쟁력 강화에 우선 투입’ 지적

- 도시민들에게 여섯 가지 농업예산 사용분야를 제시한 후 바람직한 예산배분 순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남성(36.8%), 학생(44.1%)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21.9%, 19.1%로 비슷한 수준임.
- 응답자들이 예산배분 2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분야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25.0%)’와 ‘농산물 유통개선(23.5%)’이며, 마지막 6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분야는 ‘농촌지역 복지, 생활여건 확충(31.9%)’이었음.

그림 2-10. 농업예산 지원 우선순위/ 1순위(도시민)



4. 식품안전과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

- 농산물 소비자로서 도시민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농산물 구입시 고려하는 구매 패턴, 농촌에 대한 관광수요와 불편요소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4.1. 농업인과 도시민 ‘식품안전관리 강화’ 동의

- 도시민들은 국산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제품성분/효능 표시 등 소비자 위한 정책’과 ‘농약 등 위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를 각각 34.4%, 29.3%로 꼽았음.

- ‘제품의 성분 및 효능표시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광역도시(38.6%), 학생(42.6%)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 이같은 결과는 농업인도 크게 다르지 않아 각각의 항목에서 도시민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국산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인식을 같이 하였음.

표 2-29. 국산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역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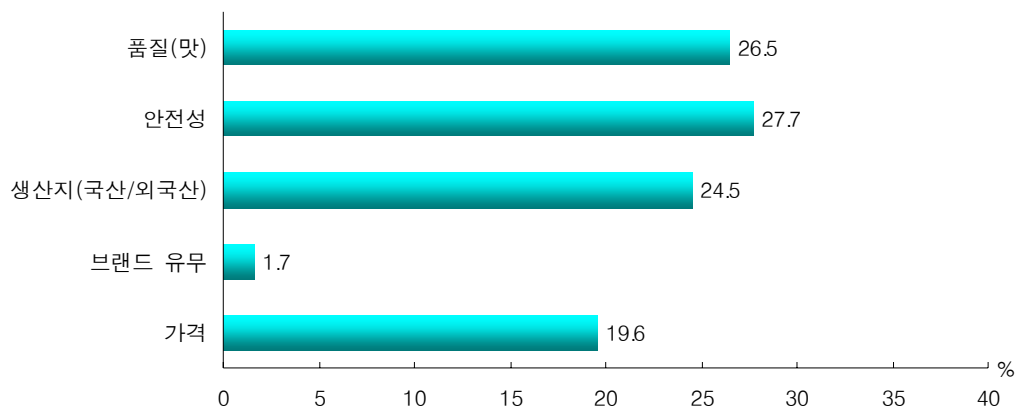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제품의 성분 및 효능 표시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	516	34.4	273	32.0
농약 등 위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	440	29.3	200	23.5
불량 농식품 생산자 엄중 처벌	242	16.1	159	18.7
수입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295	19.7	157	18.4
기타	-	-	3	0.4
모름/무응답	7	0.5	60	7.0
계	1,500	100.0	852	100.0

4.2. 농산물 구입시 ‘안전성-품질-생산지’ 순으로 고려

- 도시민에게 가격, 브랜드 유무, 생산지, 안전성, 품질(맛)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한 후 농축산물 구입 시 고려하는 순서를 물어본 결과, 1순위로 ‘안전성’, ‘품질(맛)’, ‘생산지(국산/외국산)’를 꼽은 비율이 각각 27.7%, 26.5%, 24.5%로 비슷하게 나타나 이들 세가지가 중요한 선택조건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안전성’은 서울(36.7%), 농촌거주비경험자(31.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품질(맛)’은 50대 이상(33.3%), 농촌거주경험자(29.3%)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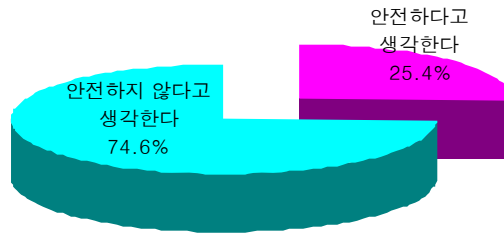
- 이들 조건에 비하면 ‘브랜드 유무’를 꼽은 비율은 다른 조건들과 비교해 절반 이하인 비율로 나타나 아직까지 농산물 구입에 브랜드 개념은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그림 2-11. 농축산물 구입시 우선순위(도시민)



- 한-미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도시민 74.6%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민 4명중 1명(25.4%) 정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은 여성(81.9%), 주부(81.1%)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2-12.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인식(도시민)



4.3. 농촌관광 45.9%가 '만족', 교통, 숙박시설 '불만족'

- 도시민들에게 2007년 한 해 동안의 농촌관광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78.7%의 응답자가 농촌관광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도시민들의 농촌관광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농촌관광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여성(82.9%), 주부(84.6%), 비농업인가족(80.7%)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농촌관광 경험자의 관광 횟수는 1~2회가 13.1%로 가장 많았으며, 농촌관광 경험자(N=320) 평균 횟수는 2.9회로 조사되었음.

표 2-30. 2007년 농촌관광 횟수

구 분	빈 도	단위: 명, %
		비 율
0회	1,180	78.7
1회	102	6.8
2회	94	6.3
3회	54	3.6
4회	18	1.2
5회	23	1.5
6회 이상	29	1.9
계	1,500	100.0
전체평균		0.6회
응답자평균		2.9회

- 농촌관광을 한 번이라도 해본 도시민은 응답자의 21.3%(320명)로, 이들 중 45.9%는 농촌관광에 대해 ‘만족(매우 5.0%, 대체로 40.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7%인 반면, ‘보통’이라는 의견이 40.9%로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만족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만족한다’는 의견은 20대(57.4%)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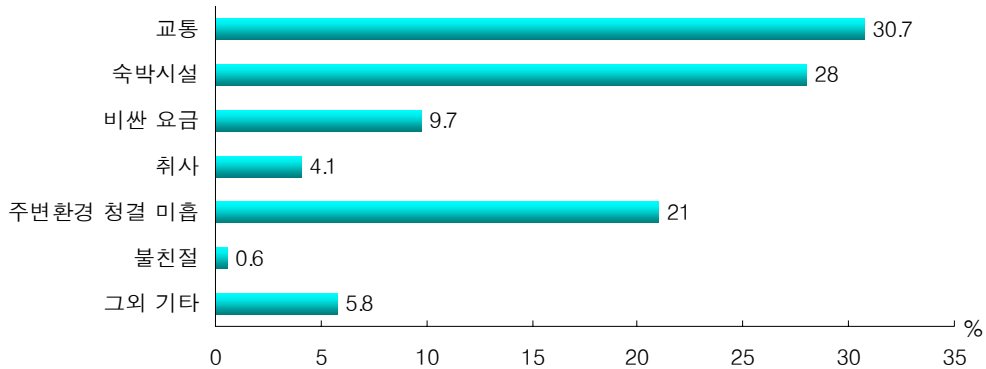
표 2-31. 2007년 농촌관광 경험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만족	16	5.0
대체로 만족	131	40.9
보통	131	40.9
대체로 불만	29	9.1
매우 불만	5	1.6
모름/무응답	8	2.5
계	320	100.0

- 한편, 농촌관광 불만족 요인으로는 30.7%가 ‘교통’, 28.0%가 ‘숙박시설’, 21.0%가 ‘주변환경 청결 미흡’을 꼽아 여행의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데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편리하고 청결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
- ‘교통’을 문제로 지적한 의견은 중소도시(34.5%), 20대(38.9%), 학생(42.6%)에게서 높게 나타남. ‘숙박시설’ 지적은 40대 이상(36.4%), 화이트칼라(35.8%)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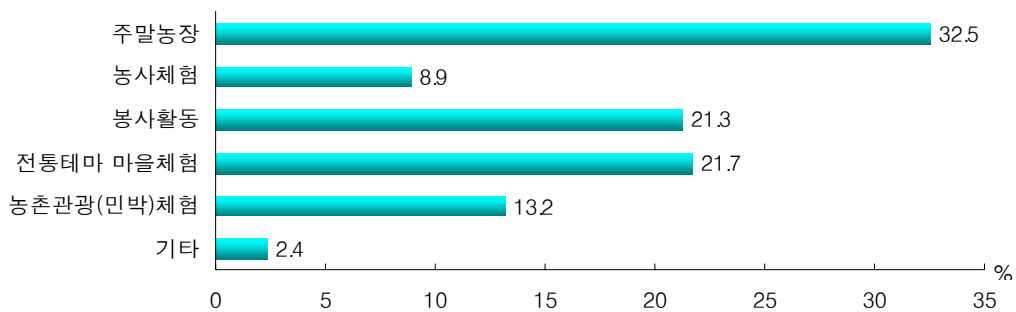
그림 2-13. 농업·농촌 관련 여가활동/관광여행 시 불편사항(도시민)



4.4. 도시민 62.7%가 농촌 체험으로 주말농장 등 생산활동 선호

- 향후 가장 해보고 싶은 농촌관련 활동으로는 ‘주말농장’이 32.5%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전통테마마을 체험’과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이 각각 21.7%와 21.3%로 비슷한 수준에서 뒤를 이었음.
- ‘감자캐기 등 농사체험(8.9%)’까지 고려할 경우 농촌에서 ‘직접 생산(주말농장 32.5%, 일손돕기 21.3%, 농사체험 8.9%)’하는 활동이 62.7%나 되어, 향후 다양한 생산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2-14. 가장 해보고 싶은 농촌활동



5. 농업인의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의식변화

- 농업인의 농업·농촌 의식변화와 농촌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평가 및 기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음.
- 또, 농사와 관련해 어떤 요인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당해 연도의 농업 여건을 가늠하고, 차기 연도 농업정책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어야할 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토록 하였음.
- 이와 함께, 농업인 의식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에도 참고가 되도록 하였음.

5.1. 농업인 25.7%, “농촌생활 5년전보다 나아졌다”

- 현재의 농촌 생활수준을 5년 전과 비교한 질문에서, 농업인 25.7%는 2007년 농촌의 생활수준이 ‘5년 전보다 좋아졌다’(약간, 매우 좋아짐 합산)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24.6%)수준을 유지하는 등 25%대의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
- ‘마찬가지다’라는 응답은 35.2%로 나타났으며, ‘나빠졌다’(약간, 매우 나빠짐 합산)는 응답률은 38.9%로, 전년(40.9%)에 비해 2.0%p 낮아졌음.

표 2-32. 5년 전과 비교한 2007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단위: 명, %

	매우좋아졌다		약간좋아졌다		마찬가지다		약간나빠졌다		매우나빠졌다		무응답/모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미만	5	1.5	80	24.7	101	31.2	89	27.5	49	15.1	.	.	324
60세이상	11	2.2	117	23.2	193	38.2	114	22.6	69	13.7	1	0.2	505
모름/무응답	1	4.3	5	21.7	6	26.1	6	26.1	5	21.7	.	.	23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12	2.3	123	23.5	190	36.3	119	22.7	79	15.1	1	0.2	524
2천만원이상	4	1.3	77	24.8	104	33.5	85	27.4	40	12.9	.	.	310
모름/무응답	1	5.6	2	11.1	6	33.3	5	27.8	4	22.2	.	.	18
계	17	2.0	202	23.7	300	35.2	209	24.5	123	14.4	1	0.1	852

- 전년 생활과 비교한 농촌 생활수준 인식에서는, ‘좋아졌다’(‘약간’, ‘매우 좋아짐’ 합산)는 응답이 13.3%로 전년(11.8%)보다 1.5%p 증가하였으며, ‘나빠졌다’(‘약간’, ‘매우 나빠짐’ 합산)는 응답도 40.3%로 부정적인 인식이 전년보다(38.7%)보다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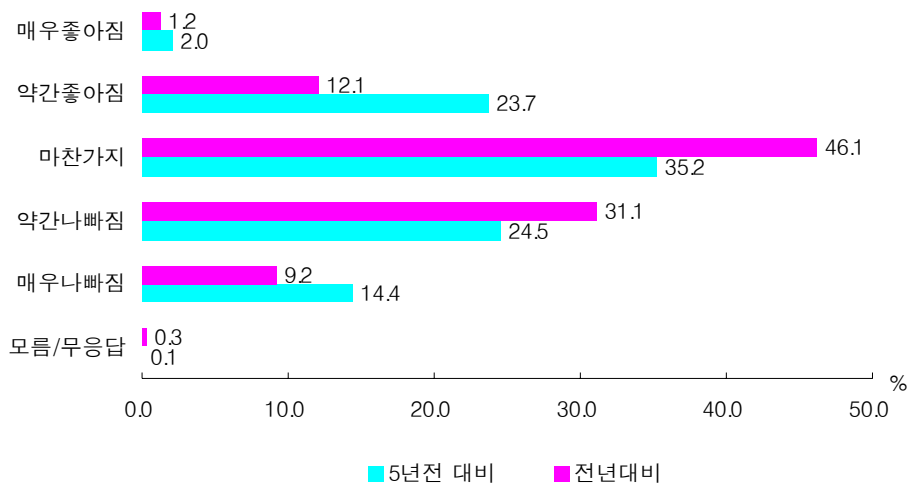
표 2-33. 전년과 비교한 2007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단위: 명, %

	매우좋아졌다		약간좋아졌다		마찬가지다		약간나빠졌다		매우나빠졌다		무응답/모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미만	2	0.6	34	10.5	154	47.5	107	33.0	27	8.3	.	.	324
60세이상	8	1.6	65	12.9	229	45.3	151	29.9	49	9.7	3	0.6	505
모름/무응답	.	.	4	17.4	10	43.5	7	30.4	2	8.7	.	.	23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8	1.5	68	13.0	241	46.0	152	29.0	52	9.9	3	0.6	524
2천만원이상	2	0.6	33	10.6	146	47.1	104	33.5	25	8.1	.	.	310
모름/무응답	.	.	2	11.1	6	33.3	9	50.0	1	5.6	.	.	18
계	10	1.2	103	12.1	393	46.1	265	31.1	78	9.2	3	0.4	852

- 농업인이 느끼는 과거(5년 전, 전년)와 비교한 2007년 농촌 생활수준 인식은 5년 전 대비(25.7%)가 전년 대비(13.3%) 생활수준 향상 인식 비율보다 12.4%p 이상 높았으며, ‘나빠졌다’는 인식은 5년 전 대비(38.9%)보다 전년 대비(40.3%)가 1.4%p 높게 나타남.

그림 2-15. 과거와 비교한 현재(2007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 농업인은 현재의 농촌생활 수준을 5년전과 비교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1994년 이후 결과와 비교해 살펴보면, ‘좋아졌다’(‘약간’, ‘매우 좋아짐’ 합산)고 응답한 비율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0~60%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1998년(26.8%)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07년에는 2000년 이후 ‘좋아졌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25.7%로 집계되어, 5년 전보다 현재의 농촌 생활수준 향상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남.
- 5년 전에 비해 생활수준이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도 14.4%로, 2006년(12.3%)에 비해 2.1%p 높아졌음.

표 2-34. 5년 전 비교 농촌생활수준 인식 연도별 변화('94-'07)

단위: 명, %

구분/연도	'06	'05	'04	'03	'02	'01	'00	'99	'98	'97	'96	'95	'94	'07
매우 좋아졌다	0.9	1.2	2.1	1.3	1.4	2.9	1.4	2.9	3.9	6.4	7.8	7.4	8.0	17(2.0)
약간 좋아졌다	23.7	15.8	18.2	16.8	15.0	17.9	13.7	28.5	22.9	34.2	45.9	52.5	51.8	202(23.7)
향상(소계)	24.6	17.0	20.3	18.1	16.4	20.8	15.1	31.4	26.8	40.6	53.7	59.9	59.8	219(25.7)
마찬가지이다	33.1	27.8	31.0	32.4	33.4	30.6	31.6	36.8	26.7	28.1	30.8	29.6	28.9	300(35.2)
약간 나빠졌다*	28.6	31.9	33.5	29.5	29.6	29.0	27.7	22.7	30.5	-	-	-	-	209(24.5)
매우 나빠졌다	12.3	23.3	15.2	20.1	20.6	19.6	25.6	9.1	16.0	31.1	15.5	10.5	11.3	123(14.4)
무응답/모름	1.4	-	-	-	-	-	-	-	-	-	-	-	-	1(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52(100.0)

* '98년 조사 항목 신설(1994년~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 조사 결과).

5.2. 미래 농촌생활 수준 긍정적인 전망 꾸준히 상승

- 향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에 대해서도 농업인은 앞으로 5년 후의 농촌생활을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1%로 긍정적인 전망이 2005년 6.8%, 2006년 13.4%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는 응답은 2005년 18.7%, 2006년 28.7%, 2007년 33.6%로 나타났으며,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42.7%로 전년(56.8%)보다 14.1%p 낮아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60세 미만(47.2%), 연소득 2천만원 이상(45.2%)일수록 높게 나타나 현재의 생활수준 만족도가 높은 계층이 오히려 미래를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5. 2007년과 비교한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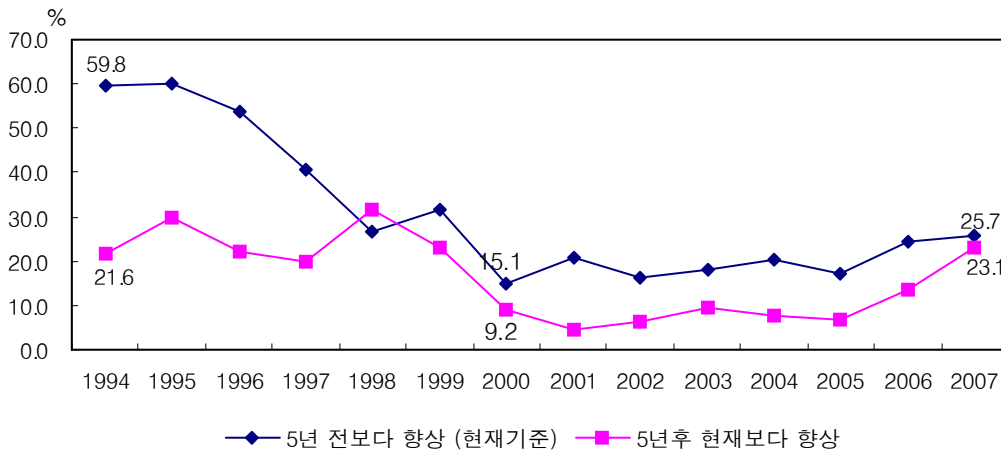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		현재와 마찬가지로일 것		현재보다 악화될 것		무응답/모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 미만	74	22.8	96	29.6	153	47.2	1	0.3	324
60세 이상	120	23.8	183	36.2	199	39.4	3	0.6	505
모름/무응답	3	13.0	7	30.4	12	52.2	1	4.3	23
연평균소득									
2천만원 미만	119	22.7	189	36.1	212	40.5	4	0.8	524
2천만원 이상	77	24.8	92	29.7	140	45.2	1	0.3	310
모름/무응답	1	5.6	5	27.8	12	66.7	.	.	18
계	197	23.1	286	33.6	364	42.7	5	0.6	852

5.3. 농촌생활 불만족요인 “주거 및 생활환경 여건”

- 현재의 농촌생활 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으로 인식하는 농업인은 UR 협상 타결 직후인 1994년 60%선에서 출발해 1998년 외환위기 이전 20~50%선을 유지했으나, 2000년 이후 20%선을 밑돌다가 점차 회복해 2007년 25%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5년 후 현재보다 향상되리라는 기대감도 1998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선을 밑돌다가 2006년 13.4%에서 2007년 23.1%로 상승해 20%선을 회복하였음.

그림 2-16. 5년 전과 5년 후 농촌 생활수준 인식과 기대 변화



-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약간, 매우 만족 합산)는 응답 비율은 17.8%로 전년(16.5%)보다 1.3%p 증가하였으며, ‘불만족한다’(약간, 매우 불만족 합산)는 비율은 41.7%로 전년(41.9%)에 비해 0.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만족한다’는 인식은 연소득 2천만원 이상(22.6%)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2-36.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그저그렇다		약간 불만		매우 불만		무응답/모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 미만	7	2.2	50	15.4	111	34.3	111	34.3	43	13.3	2	0.6	324
60세 이상	14	2.8	76	15.0	221	43.8	135	26.7	56	11.1	3	0.6	505
모름/무응답	.	.	4	17.4	9	39.1	8	34.8	2	8.7	.	.	23
연평균소득													
2천만원 미만	13	2.5	65	12.4	224	42.7	154	29.4	65	12.4	3	0.6	524
2천만원 이상	8	2.6	62	20.0	109	35.2	95	30.6	34	11.0	2	0.6	310
모름/무응답	.	.	3	16.7	8	44.4	5	27.8	2	11.1	.	.	18
계	21	2.5	130	15.3	341	40.0	254	29.8	101	11.9	5	0.6	852

-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41.7%)는 불만족 요인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24.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자녀교육 여건 열악’(21.2%), ‘복지시설 미흡’(18.9%) 등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2-37.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인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	85	24.6
자녀 교육 여건 열악	73	21.2
복지시설 미흡	65	18.9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	41	11.5
문화여가시설 미흡	27	7.8
기타	55	16.0
계	346	100.0

5.4. 농업인 80.8% ‘농촌에 계속 거주’ 의향

- 앞으로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느냐는 질문에 ‘계속 살겠다’는 농업인은 80.8%로 집계되었으며, ‘떠나겠다’는 응답은 5.2%에 그쳤음.
- 이 밖에 12.3%는 농촌을 떠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생각이다’는 응답자는 1.3%로 조사되어 전년도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2-38. 농촌에서의 거주 여부

단위: 명, %

구 분	계속 살겠다		떠날 생각이다		다시 돌아올 생각		잘 모르겠다		무응답/모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별											
60세 미만	251	77.5	25	7.7	4	1.2	44	13.6	.	.	324
60세 이상	421	83.4	17	3.4	4	0.8	59	11.7	4	0.8	505
모름/무응답	16	69.6	2	8.7	3	13.0	2	8.7	.	.	23
연평균소득											
2천만원 미만	423	80.7	26	5.0	5	1.0	67	12.8	3	0.6	524
2천만원 이상	253	81.6	16	5.2	4	1.3	36	11.6	1	0.3	310
모름/무응답	12	66.7	2	11.1	2	11.1	2	11.1	.	.	18
계	688	80.8	44	5.2	11	1.3	105	12.3	4	0.5	852

5.5. ‘농자재 가격’ 관심 크게 증가

- 2007년 농업인들의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은 ‘농산물 가격변동’이 25.9%로 전년(30.0%)에 이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분야로 나타남.
- ‘추곡수매’는 8.3%로 전년(12.7%)보다 4.4%p 감소하였으며, ‘농산물 수입 개방’도 16.8%로 전년(26.9%)보다 10.1%p나 떨어져 관심도가 낮았음.
-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기계,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가격’에 대한 관심도는 17.3%로 전년도 3.0%의 5배에 달하는 14.3%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2년간 농업인의 관심사에서 수위를 유지했던 ‘농산물 가격 변동’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 2007년 다시 25.9%로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음.

- 이밖에도 ‘농촌인력’(7.0%)과 ‘농지문제’(3.1%)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영농자금·농가부채’(10.1%), ‘농촌지역개발’(3.2%), ‘농작물 병충해, 기후’(6.3%) 등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39.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연도별 변화(복수 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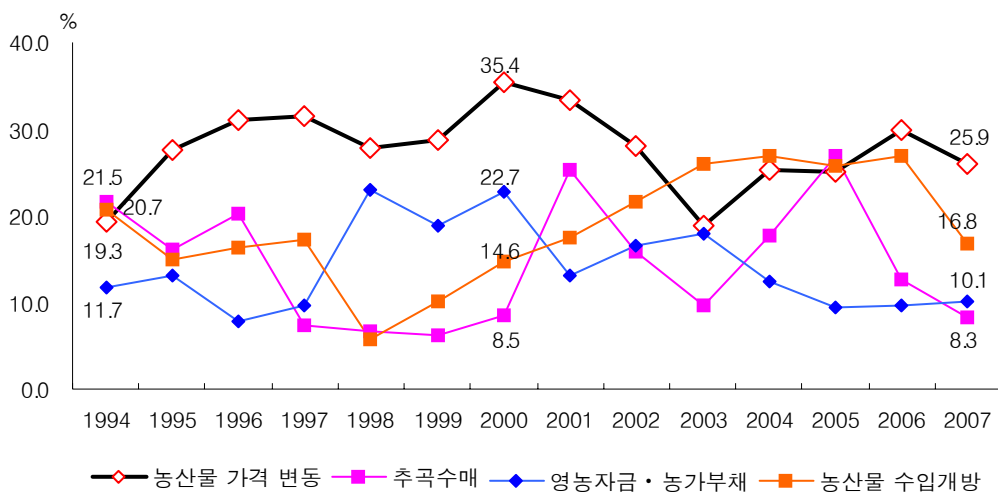
구분/년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농산물 가격변동	19.3	27.5	31.1	31.6	27.8	28.8	35.4	33.3	28.0	18.9	25.2	25.0	30.0	442(25.9)
추곡수매	21.5	16.2	20.2	7.3	6.6	6.1	8.5	25.4	15.9	9.6	17.7	26.9	12.7	142(8.3)
영농자금·농가부채	11.7	13.0	7.9	9.6	23.1	18.9	22.7	13.2	16.6	18.0	12.3	9.5	9.6	173(10.1)
농산물 수입개방	20.7	14.9	16.4	17.3	5.7	10.1	14.6	17.4	21.7	26.0	26.9	25.8	26.9	286(16.8)
농촌지역개발	6.4	6.1	4.8	15.0	3.7	3.3	2.2	1.3	1.3	1.7	2.0	0.8	1.7	55(3.2)
농촌 인력	8.1	9.6	9.2	16.2	4.0	6.7	4.3	3.0	6.4	7.3	7.4	5.3	8.4	120(7.0)
농작물병충해,기후	6.0	7.3	3.1	2.5	20.4	19.2	8.6	4.0	7.2	14.3	2.6	1.8	3.7	108(6.3)
농자재 가격	1.3	1.1	1.2	0.2	4.3	2.2	1.4	0.3	0.5	0.7	2.5	1.8	3.0	295(17.3)
영농시설 현대화*	-	-	2.0	0.1	1.4	1.9	0.3	0.4	0.2	0.7	1.0	0.5	0.7	20(1.2)
농지문제	5.6	5.5	4.1	0.2	3.0	2.8	2.0	1.8	2.2	2.9	2.4	2.4	3.1	52(3.1)
기타	-	-	-	-	-	-	-	-	-	-	-	-	0.1	11(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704(100.0)

* '96년 이후 조사 반영(1994년~200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 조사 결과).

-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변화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정리하면, ‘농산물 가격’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도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2003년부터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가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도는 1998년 이후 매년 4~5%씩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26.0%, 다시 2004년에는 26.9%로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부상하다가 2007년(16.8%)에는 관심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은 2004년부터 정부 수매제 폐지가 공론화되면서 17.7%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수매제 폐지가 발표된 2005년에 26.9%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산물 가격’을 역전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2006년(12.7%)과 2007년(8.3%)에 크게 낮아짐.
- ‘영농자금·농가부채’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은 정부의 농가 부채경감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던 2001년에 관심도가 약간 줄었다가 2004년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두 자리 수를 유지하였고, 그 뒤 2006년까지 낮아지다 2007년(10.1%)에 다시 10%대를 회복하였지만,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경향을 종합해 보면, 올해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최대 관심 사항을 보여 온 ‘농산물 가격변동’, ‘추곡수매’, ‘영농자금·농가부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2-17. 농사와 관련한 주요 관심 사항 변화



5.6. 농사와 관련한 애로사항 ‘농작물병충해·기상조건·가축질병’ 가장 많이 꼽아

- 농사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농작물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병’(18.7%),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가격’(17.9%), ‘농촌인력’(17.7%), ‘농산물 가격’(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2002년에는 ‘수입개방’을 꼽았고, 2003년에는 다시 ‘농작물 병충해, 기상·기후 조건’을, 2004년에 이어 2006년에는 ‘농촌인력’을 꼽았음.
- 2007년에는 그동안 수년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농촌인력’문제에서 ‘농작물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병’과 ‘농자재 가격’으로 애로사항이 변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임.

표 2-40. 농사와 관련한 애로 사항(복수 응답)

구 분	단위: 명, %	
	빈도	비율
농산물 가격	256	15.0
추곡수매	80	4.7
영농자금·농가부채	137	8.0
농산물 수입개방	162	9.5
농촌지역개발	33	1.9
농촌인력	302	17.7
농작물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병	319	18.7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305	17.9
영농시설 현대화	33	1.9
농지문제	40	2.4
기 타	37	2.2
계	1,704	100.0

5.7.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21.0%로 전년수준 유지

- 농업인이 농업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약간, 매우 만족 합산)는 응답은 21.0%로 전년(21.2%) 수준을 유지하였음.
-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도 인식에서 ‘매우 불만족’ 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계층은, 연령대로는 60세 이상,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1.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명, %

구 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		매우 불만		무응답/모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 미만	13	40	65	20.1	125	38.6	90	27.8	30	9.3	1	0.3	324
60세 이상	15	3.0	80	15.8	220	43.6	126	25.0	61	12.1	3	0.6	505
모름/무응답	.	.	6	26.1	11	47.8	3	13.0	3	13.0	.	.	23
연평균소득													
2천만원 미만	10	1.9	70	13.4	227	43.3	144	27.5	71	13.5	2	0.4	524
2천만원 이상	18	5.8	78	25.2	120	38.7	72	23.2	20	6.5	2	0.6	310
모름/무응답	.	.	3	16.7	9	50.0	3	16.7	3	16.7	.	.	18
계	28	3.3	151	17.7	356	41.8	219	25.7	94	11.0	4	0.5	852

-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변화 추이를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놓고 보면, 1999년 21.4%에서 2002년 7.6%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15.8%로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였음.
- 2004년도에는 20.5%로 집계됨으로써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는 등 최근 만족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가 2005년에 17.1%에 이

어 2006년 21.2%로 다시 상승, 2007년 21.0%로 20%대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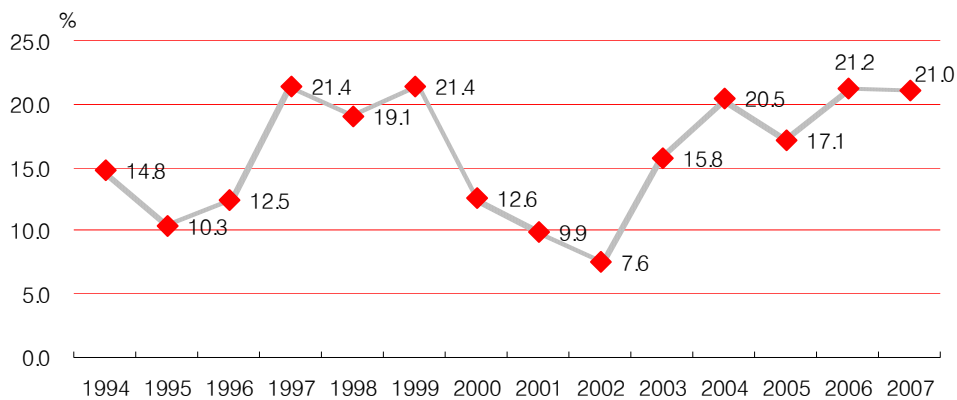
표 2-42.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94년~'07년)

단위: 명, %

구분/년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매우 만족	1.1	1.7	1.7	3.4	4.0	3.2	1.4	1.6	1.2	2.5	4.1	3.4	3.6	28(3.3)
대체로 만족	13.7	8.6	10.8	18.0	25.1	18.2	11.2	8.3	6.4	13.3	16.4	13.7	17.6	151(17.7)
만족 소계	14.8	10.3	12.5	21.4	19.1	21.4	12.6	9.9	7.6	15.8	20.5	17.1	21.2	179(21.0)
그저 그렇다	44.2	48.3	48.4	43.1	43.4	48.3	38.8	35.7	35.4	36.4	39.4	35.4	40.5	356(41.8)
약간 불만이다	41.0	27.3	26.0	24.7	20.7	21.1	28.7	29.4	28.5	35.1	27.9	27.3	28.1	219(25.7)
매우 불만*	-	14.2	13.1	10.9	6.8	9.1	19.9	25.0	28.5	12.7	12.2	20.2	9.3	94(11.0)
무응답/모름	-	-	-	-	-	-	-	-	-	-	-	-	0.8	4(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52(100.0)

* '95년 신설항목(1994년~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 조사 결과).

그림 2-18. UR출범 이후 농사만족도 변화 추이(만족 응답)



-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36.7%)는 불만족 요인으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를 가장 많이(54.3%) 꼽아,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남.
- 다음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 불안’(22.7%), ‘타 분야에 비해 정

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12.3%), '힘든 육체 노동'(6.0%), '좋지 않은 일반인의 인식'(2.8%)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2-43. 농업종사의 불만족 요인

단위: 명, %

구 분	소득보장 미흡		힘든 육체적노동		정부의 관심과 지원부족		장래불안		일반인의 좋지 않은 인식		기타		무응답/ 모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미만	75	62.0	2	1.7	12	9.9	29	24.0	1	0.8	1	0.8	1	0.8	121
60세이상	97	51.1	15	7.9	26	13.7	42	22.1	7	3.7	2	1.1	1	0.5	190
모름/무응답	.	.	2	33.3	1	16.7	1	16.7	1	16.7	.	.	1	16.7	6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115	53.0	15	6.9	28	12.9	47	21.7	6	2.8	3	1.4	3	1.4	217
2천만원이상	57	60.6	2	2.1	10	10.6	23	24.5	2	2.1	94
모름/무응답	.	.	2	33.3	1	16.7	2	33.3	1	16.7	6
계	172	54.3	19	6.0	39	12.3	72	22.7	9	2.8	3	0.9	3	0.9	317

6. 농촌사회와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

- 농업인들이 느끼는 농촌생활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살펴해보았으며, 정부로부터의 최우선 지원 복지분야, 농촌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음.

6.1. 농업인 '노인복지' 확대 가장 많이 원해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복지 분야에 대하여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7.9%가 '노인복지'를 꼽았음.

- 다음으로 ‘저소득층 복지’도 22.3%의 응답비율로 나타나 ‘노인복지’와 ‘저소득층복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0.2%에 달하였음. 이 밖에 ‘장애인 복지’와 ‘영유아 복지’, ‘여성복지’ 등은 5% 이내의 소수 의견으로 나타남.

표 2-44. 현 거주지에서 복지증진을 위한 우선 관심분야

단위: 명, %

구 분	저소득층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영유아 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여성복지		기타		무응답/모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미만	80	24.7	163	50.3	3	0.9	12	3.7	22	6.8	20	6.2	6	1.9	18	5.6	324
60세이상	106	21.0	318	63.0	6	1.2	21	4.2	13	2.6	5	1.0	4	0.8	32	6.3	505
모름/무응답	4	17.4	12	52.2	1	4.3	2	8.7	4	17.4	23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126	24.0	308	58.8	6	1.1	20	3.8	15	2.9	10	1.9	3	0.6	36	6.9	524
2천만원이상	61	19.7	173	55.8	3	1.0	15	4.8	20	6.5	15	4.8	7	2.3	16	5.2	310
모름/무응답	3	16.7	12	66.7	1	5.6	2	11.1	18
계	190	22.3	493	57.9	10	1.2	35	4.1	35	4.1	25	2.9	10	1.2	54	6.3	852

- 개인의 입장에서 정부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복지 분야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의료비 지원’(26.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양 문제’(25.7%), ‘농촌 사회복지시설 확충’(18.0%), ‘교육비 지원’(12.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의료비 지원’이라는 응답은 60세 미만(20.1%), 연평균소득 2천만원 미만(30.5%)인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표 2-45. 개인의 입장에서 정부의 최우선 복지분야

단위: 명, %

구 분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자녀 보육 문제		노인부양 문제		사회복지 시설 확충		문화/여가 시설 확충		기타		무응답/모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미만	65	20.1	80	24.7	8	2.5	48	14.8	66	20.4	40	12.3	2	0.6	15	4.6	324
60세이상	156	0.9	24	4.8	12	2.4	166	32.9	83	16.4	28	5.5	3	0.6	33	6.5	505
모름/무응답	3	13.0	2	8.7	2	8.7	5	21.7	4	17.4	3	13.0	.	.	4	17.4	23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160	30.5	38	7.3	15	2.9	158	30.2	84	16.0	31	5.9	3	0.6	35	6.7	524
2천만원이상	62	20.0	64	20.6	7	2.3	57	18.4	66	21.3	37	11.9	2	0.6	15	4.8	310
모름/무응답	2	11.1	4	22.2	.	.	4	22.2	3	16.7	3	16.7	.	.	2	11.1	18
계	224	26.3	106	12.4	22	2.6	219	25.7	153	18.0	71	8.3	5	0.6	52	6.1	852

6.2. 농촌노인 지원책으로 ‘교통수당 등 현금지원 확대’ 꼽아

- 농촌의 노인들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지원되어야 할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현금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2-46. 농촌노인을 위한 최우선 복지서비스

단위: 명, %

구 분	노인 여가시설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재가복지 서비스		복지시설 설치 확대		현금지원 확대		기타		무응답/모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미만	35	10.8	70	21.6	32	9.9	89	27.5	93	28.7	4	1.2	1	0.3	324
60세이상	52	10.3	112	22.2	49	9.7	93	18.4	197	39.0	1	0.2	1	0.2	505
모름/무응답	.	.	5	21.7	.	.	2	8.7	4	17.4	.	.	12	52.2	23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55	10.5	118	22.5	47	9.0	105	20.0	195	37.2	3	0.6	1	0.2	524
2천만원이상	32	10.3	68	21.9	34	11.0	79	25.5	94	30.3	2	0.6	1	0.3	310
모름/무응답	.	.	1	5.6	5	27.8	.	.	12	66.7	18
계	87	10.2	187	21.9	81	9.5	184	21.6	294	34.5	5	0.6	14	1.6	852

- 그 다음으로 ‘농촌 노인 일자리 확대’(21.9%)와 ‘치매노인,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확대’(21.6%)등으로 응답하였음.
- 지역(시군단위)의 공동체의식(협동심, 친밀감 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마을단체(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를 41.9%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을 ‘지역공동센터(사회복지관,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등)’(32.6%)라고 응답하였음. 마을단체’라는 응답은 60세 이상(44.6%), 연평균소득 2천만원 미만(43.3%)인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표 2-47. 지역 공동체의식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단위: 명, %

구분	마을단체		지자체 및 공무원		지역공동센터		학교		종교단체		좋은 이웃		서비스 편의시설		지역행사		기타		무응답/모름		계
	반도	비율	반도	비율	반도	비율	반도	비율	반도	비율	반도	비율	반도	비율	반도	비율	반도	비율	반도	비율	
연령별																					
60세미만	129	39.8	20	6.2	113	34.9	2	0.6	3	0.9	19	5.9	5	1.5	27	8.3	3	0.9	3	0.9	324
60세이상	225	44.6	42	8.3	160	31.7	1	0.2	10	2.0	29	5.7	1	0.2	28	5.5	.	.	9	1.8	505
모름/무응답	3	13.0	1	4.3	5	21.7	2	8.7	.	.	12	52.2	23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227	43.3	38	7.3	179	34.2	1	0.2	11	2.1	25	4.8	3	0.6	29	5.5	.	.	11	2.1	524
2천만원이상	129	41.6	25	8.1	95	30.6	2	0.6	2	0.6	22	7.1	3	1.0	28	9.0	3	1.0	1	0.3	310
모름/무응답	1	5.6	.	.	4	22.2	1	5.6	12	66.7	18
계	357	41.9	63	7.4	278	32.6	3	0.4	13	1.5	48	5.6	6	0.7	57	6.7	3	0.4	24	2.8	852

- 정부가 농촌지역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은 ‘농촌주민의 교육과 건강 증진 시설 확충’을 30.4%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농촌지역 주택 보급, 개량’(14.2%), ‘농촌지역 자연환경 보호’(11.9%), ‘도시 수준의 문화시설 제공’(11.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2-48. 농촌지역사회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복지정책

단위: 명, %

구분	자연환경 보호		주택보급, 개량		교통수단 확충		교육·건강·증진 시설 확충		사업체 투자확대		문화시설 제공		지방자치 증진		기타		무응답/모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미만	29	9.0	46	4.2	16	4.9	115	35.5	59	18.2	33	10.2	18	5.6	6	1.9	2	0.6		324
60세이상	71	14.1	74	14.7	62	12.3	141	27.9	73	14.5	62	12.3	18	3.6	1	0.2	3	0.6		505
모름/무응답	1	4.3	1	4.3	1	4.3	3	13.0	3	13.0	2	8.7	12	52.2		23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65	12.4	86	16.4	57	10.9	139	26.5	87	16.6	65	12.4	19	3.6	4	0.8	2	0.4		524
2천만원이상	35	11.3	34	11.0	20	6.5	119	38.4	48	15.5	31	10.0	17	5.5	3	1.0	3	1.0		310
모름/무응답	1	5.6	1	5.6	2	11.1	1	5.6	.	.	1	5.6	12	66.7		18
계	101	11.9	121	14.2	79	9.3	259	30.4	135	15.8	97	11.4	36	4.2	7	0.8	17	2.0		852

6.3. 농촌 2개 마을 중 1개 마을에 외국인 며느리 거주

-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외국인 며느리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50.5%, ‘있다’는 47.4%가 응답해 2개 마을에 1개 마을 정도는 외국인 며느리가 살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49. 마을에 외국인 며느리 거주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있다	404	47.4
없다	430	50.5
무응답/모름	18	2.1
계	852	100.0

- 마을에 외국인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자(404명)를 대상으로 외국인 며느리 거주수를 물어본 결과, 1명(43.4%)과 2~3명(44.2%)이 87.6%를 차지해 대부분 3명 이하의 외국인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며느리 수는 평균 2.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최대 15명의 외국인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음.

2-50. 마을의 외국인 며느리 거주 수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1명	164	43.4
2~3명	167	44.2
4명 이상	47	12.4
계	378	100.0
응답자 평균	2.2명	
최대값	15명	

- 외국인 며느리가 마을사람들과의 왕래 및 의사소통이 원활한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잘 된다’(매우, 잘되는 편 합산)는 의견이 38.9%, ‘잘 안된다’(매우, 전혀 안되는 편 합산)는 의견은 32.6%로 나타나, 10명중 3명 정도는 외국인 며느리와의 왕래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51. 거주 외국인 며느리와의 의사소통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매우 잘 되고 있다	44	11.2
잘 되는 편이다	109	27.7
보통이다	112	28.5
잘 안되는 편이다	113	28.8
전혀 안되는 편이다	15	3.8
계	393	100.0

제 3 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 도시민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음.
- 도시민과 농업인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은 그 어느 해보다 활발히 제기되었으며, 각 현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었음.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1.1. 개황

- 자유의견란을 통해 제시된 도시민과 농업인의 농업정책 건의와 농업·농촌에 대한 의견 중 분야별로 정리된 의견은, 도시민 1,324건, 농업인 490건으로 집계되었음. 도시민은 ‘농산물 유통, 가격’(368건)에, 농업인은 ‘농업정책’(105건)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음.

- 다음으로 도시민은 ‘농산물 안전성’(220건), ‘농업정책’(193건), ‘농촌지역개발, 복지’(148건), ‘농촌인력, 후계인력’(136건), ‘영농자금, 농가부채’(111건) 등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농업인은 ‘영농자금, 농가부채’(86건), ‘농산물 유통, 가격’(69건), ‘농촌인력, 후계인력’(49건), ‘영농자재’(48), ‘농지정책’(40), ‘쌀산업 정책’(34건) 등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건의사항 전문은 부록 1을 참조.

표 3-1. 농정건의 요지 집계(도시민 1,324건, 농업인 490건)

분 야	구분	건 수	요 지
농업정책 전반	도시민	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제시 필요 • 도시민과 농업인의 융화로 농촌경제가 발전 되길
	농업인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 주길 •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해주길
농촌관광	도시민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체험 필요 • 농촌관광의 체계적인 시스템 필요
농산물 유통, 가격	도시민	3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직거래 필요 • 불법 수입 농산물 규제 강화
농산물 안전성	도시민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물질 철저한 관리 • 유기농산물 생산 활발화
농촌 자연환경	도시민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안타깝다는 • 훼손되는 농촌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농업개방 국제협상	도시민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상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 농업에 피해가 안가도록 했으면
	농업인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성 있는 국제협상이 되길 • FTA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분 야	구분	건 수	요 지
쌀산업 정책	도시민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쌀 소비에 노력해야 • 식량 무기화 우려
	농업인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값 하락에 따른 보상 필요 • 우리쌀도 고품질화되어야
영농자금, 농가부채	도시민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 시급 • 영농자금 혜택을 끌고루 받을수 있도록
	농업인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저리자금으로 전환해주길 • 농가부채 탕감으로 젊은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농촌인력, 후계인력	도시민	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인력 양성 필요 • 농촌의 고령화 문제 해결
	농업인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노인들에게도 일자리 창출 필요 • 농촌으로의 귀농 유인책 필요
농지정책	도시민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매매 활성화 필요 • 농지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마련 필요
	농업인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거래 규제 완화해 도시민에게까지 확장 • 소농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영농자재	농업인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농사를 짓기 힘들다는 • 영농자재 구입시 정부 보조금 필요
농업기관	도시민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관련 기관에서 실질적인 농업정책을 해주길
	농업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농업정책 조직의 개혁과 역할 기대
농촌 지역개발, 복지	도시민	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에 문화생활 확대 • 의료, 복지시설의 균형있는 발전 필요
	농업인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 • 복지시설의 빠른 설치 필요
영농환경개선	농업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인증에서 유통까지 책임지고 소비자와 연계해주길
기타	도시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을 알리는 홍보 통합포털사이트 구축 필요 • 농업인의 의식변화가 우선
	농업인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조수 개체 증가로 농산물 피해가 크다는 • 지역별 특화작물 개발 필요

2.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 도시민과 농업인의 농업정책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민들은 농산물 가격과 농산물 안전성, 그리고 농촌개발과 농촌후계인력 등에 관심이 많았으며, 농업인은 농업정책, 농가부채, 유통 문제에 관심과 정책 건의가 많았음.
- 도시민은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했고, 농업인들은 농업정책이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산물 유통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 도시민은 유통 개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농협의 역할도 강조하였음. 농업인은 직거래 확대와 유통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의가 많았음.
-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도시민들은 농산물 시장이 지나치게 개방되는 것을 경계했으며, 농업인들은 정부가 피해대책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하였음. 쌀산업 정책에 대해서 도시민은 쌀 품질 개선과 소비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농업인들은 쌀값 하락에 따른 보상을 요구함.
- 농가부채에 대해서 도시민들은 직접적인 지원보다 간접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주문하였고, 농업인들은 장기저리융자 방식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함. 농지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이나 농업인 모두 농지거래 규제를 완화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 이밖에, 농촌관광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고, 농촌관광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음. 농촌지역 문화시설과 복지확대에 대한 의견도 다수 있었음.

제 4 장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8년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852건 회수) 도시민은 면접조사를, 농업인은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주요 조사 내용은 새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 농업가치 인식, 농산물 시장개방, 도시민의 농업·농촌 수요 등임.

농업인, 농정공약 관심 1순위 ‘소득보전특별법’

- 농업인은 새정부가 제시한 농정공약 중 관심과 기대가 가장 큰 공약으로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제정’을 꼽았으며,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순으로 응답해 소득보장 관련 공약에 관심을 집중하였음.
- 농업인은 새정부 최우선 농업분야 현안과제로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마련’을 가장 많이(47.4%) 꼽았으며,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대

책’(17.4%), ‘도시-농촌 양극화 해소방안 제시’(15.0%) 순으로 응답하였음.

- 농업인 73.6%는 새정부가 제시한 농정공약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그중 공약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지원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도 11.4%에 달해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도시민과 농업인은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입장에서 새정부가 농업·농촌 문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도시민 45.3%, 농업인 69.0%)했고, 기대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2~3배에 달하였음.

농지거래규제 완화 공약 ‘찬성’ 우세, 한-미 FTA 비준 ‘다양한 견해’

- 새정부 농업정책 공약 중 농지거래규제 완화에 대해 도시민 73.2%, 농업인 68.5%가 찬성하여 높은 기대감을 보였으나, 국민 4명중 1명 정도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대해 도시민은 ‘원안대로 국회 비준 노력(36.5%)’, ‘비준 원점에서 재검토(31.9%)’, ‘국민투표로 결정(31.6%)’ 등 세 가지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농업인은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원점에서 재검토 42.6%, 국민투표로 결정 24.2%) ‘원안대로 국회 비준 노력’도 26.6%가 찬성하여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고 있음.
- 농업인들은 확대되길 원하는 투융자사업 분야로 ‘직불제 확대’를 가장 많이 (29.3%) 꼽았으며, ‘농촌 지역개발’(13.7%), ‘농외소득원 확충’(13.5%) 순으로 선호하였음. 도시민들은 농업예산 배분 우선순위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33.7%), ‘식량자급률 향상’(21.9%), ‘식품의 안전성 확보’(19.1%) 순으로 꼽았음.

‘우리농산물 외국산 비해 안전’ 86.5%, ‘미국산 쇠고기 불안’ 74.6%

- 농축산물 구입 시 가격, 브랜드, 생산지, 안전성, 품질(맛) 등 다섯 가지 항목 중 고려하는 순서를 물어본 결과, 1순위로 ‘안전성’을 꼽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격 등 다른 조건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안전성’ 다음으로는 ‘품질(맛)’, ‘생산지’ 순으로 꼽았으며 비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이와 관련 ‘우리농산물이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는 주장에 도시민 86.5%가 동의하여 국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반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서는 74.6%의 도시민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촌관광 경험자 절반 정도만 ‘만족’, 교통·숙박시설 불만

- 2007년 한 해 농촌관광을 한 번이라도 해본 도시민은 응답자의 21.3%(320명)로 이들 중 45.9%는 농촌관광에 ‘만족’했다고 응답. ‘불만족’은 10.6%인 반면, ‘보통’은 40.9%로 정책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만족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농촌관광 불만족 요인으로는 30.7%가 ‘교통’, 28.0%가 ‘숙박시설’, 21.0%가 ‘주변환경 청결 미흡’을 꼽아 여행의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 향후 가장 해보고 싶은 농촌관련 활동으로는 ‘주말농장’(32.5%), ‘전통테마마을 체험’(21.7%),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21.3%) 순으로 선호하였음. ‘감자캐기 등 농사체험(8.9%)’까지 고려할 경우 농촌에서 ‘직접 생산’하는 활동에 높은 관심을(62.7%) 보인 것으로 향후 다양한 생산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함.

농산물시장 개방되면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최대한 보호해야

-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네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농산물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 동의 67.0%,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동의 82.6%, ‘국가는 식량안보를 위해 최대한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동의 95.5% 등으로 나타났다.
- 반면, 도시민 입장에서 볼 때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더 유리해진다’는 의견에도 63.5%가 동의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부작용이 따르지만 소비자는 더 유리해 진다는 견해가 뚜렷하였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향후 통상협상에서 농업보호’ 주문

- 한-중, 한-EU FTA와 향후의 통상협상에서 ‘새정부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시민 73.0%, 농업인이 76.8%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가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도시민 중에는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23.9%가 찬성하고 있고, 여기에 적극적인 개방 의견까지 포함하면 27.0%가 개방 확대에 찬성하고 있어 여전히 농업인과 견해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시민은 48.6%가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 등 농업 구조조정’을 꼽은 반면에 농업인은 57.3%가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을 꼽아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음.

농업·농촌 공익가치 유지에 39.1%만 세금 추가부담 의향

- 농업·농촌이 가진 1차적인 기능인 먹거리 생산 이외의 사회·문화적 공익 기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도시민들(87.3%)이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응답은 12.7%로 낮게 나타나 공익기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찬성 39.1%, 반대 28.4%, 유보적 의견이 32.5%로 나타나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익기능의 가치평가에 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데는 ‘반대’ 의견이 다소 높아져 직접 비용부담에 개입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 도시민 85.8%는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77.5%),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것’(8.3%)이라고 응답해 대다수가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농산물을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 현재 농업·농촌 문제로 57.9%가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밖에 ‘식량공급 차질’, ‘농산물 안전 문제’, ‘환경파괴’ 순으로 꼽았음.

도시민이 농업인 보다 ‘농업의 발전 가능성’ 긍정적 전망

- ‘농산물이 공산품보다 싸다’는데 동의하는 비중이 도시민 63.0%, 농업인 85.7%로 가장 큰 차이(22.7%p)를 보였으며, ‘농산물 가격 폭락시 국가가 농가소득을 보상에 줘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도시민 77.7%, 농업인 94.5%가 동의해 인식차이(16.8%p)가 컸음.

- 반면, ‘농업의 발전가능성’에는 도시민 35.8%, 농업인 19.6%가 동의하여 16.2%p의 차이를 보였으며,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 있다’는 항목에도 도시민 35.2%, 농업인 26.6%가 동의해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농업·농촌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음.
- 이같은 이유로 ‘자녀가 원하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응답도 도시민이 45.7%, 농업인 39.6%로 도시민이 높게 나타났음.

농업인 생활 및 직업만족도 20%대 유지, 농자재 가격 상승 우려

- 농업인의 인식변화는, 농업인 25.7%가 2007년 농촌의 생활수준이 ‘5년 전보다 좋아졌다’(약간, 매우 좋아짐 합산)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24.6%)수준을 유지하는 등 25%대의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
- 5년 후의 농촌생활을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05년 6.8%→2006년 13.4%→2007년 23.1%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사와 관련한 관심사항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자재 가격’에 대한 관심도는 17.3%로 전년(3.0%)도의 5배에 달하는 14.3%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2004년에 처음 20%대를 넘은 이후 2005년에 17.1%, 2006년 21.2%에서 2007년도에도 21.0%로 20%대를 유지하고 있음.

농촌지역 ‘노인복지’ 확대 요구, 외국인 며느리 정착프로그램 필요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복지 분야에 대하여 응답

자의 과반수가 넘는 57.9%가 ‘노인복지’를 꼽았고, ‘의료비 지원’(26.3%)을 가장 많이 정부에 기대하였음.

- 2개 마을 중 1개 마을 정도는 외국인 며느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주민 10명 중 3명 정도는 외국인 며느리와 왕래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국인 며느리 정착프로그램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함.

2. 시사점

- 새정부 출범에 앞서 실시한 이번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새정부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농촌문제를 잘 풀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인들은 새정부 최우선 과제로 개방 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농정공약 중에서는 소득보전특별법 제정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소득안정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였음. 이에 반해 도시민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를 바라고 있는 등 농업인과 시각차이를 보였음.
- 농지거래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도시민 73.2%, 농업인 68.5%가 찬성하였으나 우려의 시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정책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해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으나, 농업·농촌 공익가치 인정(53.6%)과 비용부담 의사(39.1%)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현실에 대한 좀더 구체

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도시민 95.5%는 식량안보를 위해 국가가 농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하다거나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45.8%에 달해 농업인과 인식차이가 뚜렷하였음.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대해서 농업인은 반대의사(42.6%)가 분명하지만 도시민은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도시민 10명 중 7명이 ‘불안’하다고 응답하였음.
- 도시민 농산물 구입 조건으로는 안전성-품질(맛)-생산지(국산/외국산) 순으로 파악되어 저가의 농산물 공급정책을 탈피하고 안전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도시민 10명 중 2명 정도(21.3%)가 지난 한 해 농촌관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절반 정도(45.9%)만 만족했다고 응답하였음. 불만족 요인으로 꼽은 교통, 숙박 등 농촌관광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도시민의 관광 수요를 농촌지역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요구됨.
- 이밖에, 농업인 의식변화는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생활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촌 노인복지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아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며느리가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부 록 1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책 건의 전문³⁾

1. 도시민 분야별 건의사항

① 농업정책

-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되는 정책 제시
- 정부 지원 강화
-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 수입농산물 규제완화
-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 차이 없게
- 구매가가 너무 저렴
- 정부가 농가부채를 책임질 것
- 경쟁력 높일 것
- 농업의 기계화
- 특수 농작물로 수익 올렸으면
-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 품질 개선
- 농업인과 도시인의 융화로 농촌경제 도움
- 정부에서 정책 바꾸어 농가를 떠나지 않게
- 농특세 과다
- FTA 농업정책에 신경쓸 것

3) 정책건의 전문은 도시민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하나로 정리하여 게재하였으며, 농업인 정책건의 내용은 일부 문구 수정 등을 거쳐 전문을 게재함.

- 쌀값 올릴 것
- 수혜입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세금 거두어 농촌 보상
- 농업에 대한 인식강화 교육
- 후계인력 양성
- 농업인과 농산물 개방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정책 정할 것
-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지 않게 철저한 지도
- 식량자원의 유지보급 위한 정부수매 확대
-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났으면
- 농업의 자생력 키웠으면
- 비료 저렴하게
-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농촌문제를 다룰 것
- 농산물 이용하도록 홍보
- 농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관심
- 농업의 중요성 강조
- FTA 협상내용 시민에게 알릴 것
-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에 신경쓸 것
-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줄이는 정책
- 농촌이 안정된 정책
- 농지를 개발해 친환경 제품을 증가시켜 농촌수입 증가
- 중간상인의 유통마진을 줄이는 정책
- 젊은층 농민이 이주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기술지원
- 농번기 때 약치는 날짜를 한꺼번에 잡았으면
- 농업정책 활성화
- 농업 난항들을 잘 파악해 문제해결
- 농산물 판로 개선
- 농민에 대한 복지 강화
- 농업정책이 너무 개방적임
- 수입농산물 안전성 확보가 없음

② 농촌관광

- 농촌관광 상품화
- 흥미 유발
- 농촌관광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번갈아 할 것
- 특성화된 농촌 육성
- 바가지 요금 줄일 것
- 골고루 혜택갈 수 있게
- 농촌 체험관 발전
- 농촌관광 명소 많이 만들 것
- 교통 편리성
- 관광사업에 노력
- 깨끗한 환경
-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체험

③ 농산물 유통, 가격

- 중간 유통인의 이익만 챙겨 농가와 소비자의 불이익 증가
- 농산물 직거래 양성화(활성화)
- 중간마진 줄였으면
- 운영자금에 대한 농협의 관심 필요
- 생산자 고부가 가치 창출 유통단계 축소
- 생산자와 소비자 직판 확인을 할 수 있게
- 경쟁력있는 상품과 유통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
- 농촌에게 유통마진을 많이 주었으면
- 농산물 가격 보장
- 농산물 직거래장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 농산물 가격 저림과 유통체계가 바로 섰으면
- 농산물 가격 안정시켜야
- 판로 확보 요망

-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안전성
- 농민에게 더 많은 이득이 갈 수 있게 유통과정 간편화
- 유통과정에서 산지가격이 너무 적다
- 신선하게
- 투명한 유통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자가 살 수 있게
- 유통단계의 축소 및 도농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볼 수 있게 시스템 개발 필요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개선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 최소화
- 농산물 유통의 체계화, 합리화
- 농산물 유통, 가격 등의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
- 철저한 관리와 품질보호 강화로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길
- 유통단계 축소
- 농산물 적정가격 관리
- 품질이 수입품에 비해 우수하지 않은 제품들도 너무 비싸다
- 수입품을 속여서 판매하는 것
- 농가소득이 안정되게끔 적극적인 정책 추진
- 농산물 가격이 생산자, 소비자가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었으면
- 안정적 공급
- 비료가격 많이 오름
-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의 안정으로 농민들의 경제생활이 안정되어야
- 생산비 절감방안을 모색하여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과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가격하락
-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과의 가격차이를 줄였으면
- 대형마트에서 외국농산물 싸게 팔지말고 시장을 늘려서 우리 농산물 다량판매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가격 불균형
- 정부에서 과잉생산 안되게 정책 수립
- 가격 평준화
- 농민들이 정부에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 유통하여 가격을 정해서 유통 원활하게

- 농업인에게 도움될 수 있는 대응책을 정책에 반영
- 농산물 판로가 잘 되도록 정부가 유통질서 유지시켜야
- 생산자 보호를 위해 힘쓸 것
- 생산성에 맞지 않는 가격정책 개선
- 농산물 가격 너무 오르지 않게 정부에서 규제
- 중국산 유통이 너무 난무함
- 농가 생산비에 비해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비쌌
-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애용했으면
- 특화된 농산물로 경쟁력 갖추어야
-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유통하는 사람에게 엄중 처벌
- 체계적인 생산, 유통, 안전성, 가격들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농업인이 자신이 생산한 품목에 대한 적절한 가격보상 및 수요의 예측가능한 품목결정

④ 농산물 안전성

- 지역특산물에 대한 합당한 법안기준 필요
- 농약, 항생제 투여의 규격 규제화
-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해줄 것
- 농약첨가제 규격 제한
-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위주의 농업 개선요망
-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농약 등 위해물질 관리
- 수입쇠고기 등 안전성 철저히 감시
- 유전자 조작
- 먹거리 웰빙으로 많이 생산했으면
- 유기농 농산물 생산
- 생산지에서 철저한 검사가 필요
- 안전한 농산물 관리와 향후 확실한 식량안보의 계획수립
- 농산물 안전성 표시를 잘해서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게
- 생산자가 원산지 속이지 말 것

- 정부가 개입해서 검사제도 체계화
- 불량농산물 퇴출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
-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 산지표시 의무화
- 농약, 원산지 확인 검증
- 농산물에 농약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표시했으면
- 잔류농약에 대해서 검사를 더 확실하게
- 생산자 표시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먹거리의 안전성과 유통과정 개선으로 농산물 품질 향상
- 식품의 유통기간 등 철저히 지켜져야
- 농산물의 성분과 효능을 표시해야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했으면
- 성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게

⑤ 농업협상

-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FTA 협상
-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 계속 있을 협상에서 알맞은 조건 잘 제시했으면
- 농촌이 피해가 안가도록 협상
- FTA 협상이 잘 이루어져 국민, 농민에게 이익갈 수 있도록
- FTA에서 이익을 본 기업이 농촌에 투자해야 함

⑥ 쌀산업 정책

- 쌀을 계속적으로 자급자족해야 함
- 수입쌀 개방 반대
- 쌀값이 너무 싼
- 수입쌀 문제 해결되어 우리나라 쌀이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에 공급 요망
- 정부수매를 많이 해주었으면

- 무조건 개방이 아닌 농민보호를 위해 적극적 노력 필요
- 쌀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 필요
- 쌀 외에 대체작물로 농가소득을 올려야 함
- 쌀수매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보전해야 함
- 쌀을 소비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많이 소비하도록 노력
- 추곡수매가를 올려야 함
- 안정적인 쌀가격 제시해 수입쌀이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함
- 식량 무기화 우려
- 쌀산업 보호

⑦ 영농자금, 농가부채

-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를 정부가 책임
- 영농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어야 함
- 농가부채를 이자없이 갚을 수 있도록
- 영농자금을 충분히 제공
-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보다 시장개방에 맞춰 경쟁력있는 농가육성이 시급
- 농협에서 고금리 받는 것 금지
- 영농부채율이 생기지 않도록 저금리 보상
- 영농자금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 영농자금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부채당감 시행에 있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 맹목적으로 보조금 주지말고 현실파악해서 확실하게 혜택줘야
- 농민부채를 장기간 보조해야 함
- 영농자금의 효율성 재고 필요
- 젊은층이 정착하게 되면 저렴한 금리로 영농자금 지원
- 농기계 보조금을 다시 부활
- 영농자금 부채를 낮출 수 있는 정책

⑧ 농촌인력, 후계인력

- 농어민 양성하여 좋은 먹거리 재배할 수 있도록
- 젊은 인재 양성
- 농촌의 고부가 가치 창출해 젊은 인력 유치
- 고령화 문제 해결할 것
- 농촌인력 지원
- 농민보호를 해야
- 귀농자금 지원 요망
-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인재양성
- 공공근로 하는 일손을 농촌일손 돕기로 전환
- 실업계고등학교도 농업계열을 가르쳐 전문적 인재 양성
- 50대도 후계자 책정이 되어야 함

⑨ 농지

- 농지매매 활성화로 농업인도 재투자 가능하게
- 농지를 특수작물을 이용하여 이익 얻기
- 농지를 망가뜨려서 공장 짓는 것이 불안함
- 농지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으로 농가소득 증대
- 농지를 도시인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 농지매매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⑩ 농업기관

- 농협 등 농업기관에서 농촌에 실질적 정책 마련했으면
- 민원이나 단체들이 부족함

⑪ 농촌 지역개발, 복지

- 도시화되는 것보다 자연과 환경을 보존해 줄 것
- 적당한 개발로 도시와 농촌의 지역균형을 맞춰줄 것

- 농촌의 복지향상
-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많음
- 농촌문화생활 높이기
- 농촌지역 개발
- 친환경 농촌개발을 해야함
- 농촌의 독거노인위한 복지강화
- 편의시설 마련
- 농촌의 교통개발
- 경제여건 해결
- 농촌지역 도시적으로 깔끔하게 개발되었으면
- 의료, 복지 시설 균형있게 변화되어야
- 의료시설 미비하므로 늘렸으면
- 농촌특산물 특성화시켜 경쟁력 강화
- 농촌의 교육여건 향상
- 농촌의 주변환경 청결
- 농촌을 관광지로 활성화시킬 것
- 농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폐지
- 농지를 위한 작물재배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면
- 생활환경 개선
- 무분별한 개발 자제
- 농민들도 정부에게만 탓하지 말고 개발·연구했으면

⑫ 농촌 자연환경

- 훼손되지 않게 농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
- 정부·공장·물류창고들이 농지를 너무 많이 파손시킴
- 자연환경 보존했으면
- 자연재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음
- 개발을 핑계로 무분별하게 산을 파헤치지 말 것

- 10년 후에 우리아이들이 농촌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 자연재해 때 나라에서 보상해 주었으면
- 길을 넓혀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결
- 무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파괴의 우려 있음
- 자연환경·교통 발전시키도록
- 자연환경 오염 안되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
- 농촌에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해결
- 토질, 수질오염에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어
- 골프장 등의 개발 허가 잘 알아보고 해 줄 것
- 전통문화 잘 보존하여 아이들 보여줄 수 있는 기관 많았으면
- 농약사용 자제

⑬ 기타

- 농촌을 알리는 홍보 통합포털사이트 구축
- 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성있도록 해야 함
-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 갖추고 고품질 생산전환 통해 지구책마련 필요
- 농업인의 의식변화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 특화작물을 육성해야
-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표시의무를 강화해야
- 노력에 비해 소득부분이 보상 안됨
- 농민의 의식이 바뀌어 경쟁력 있게 농약 덜 사용했으면
- 농기계를 안전하게 만들어 작동이나 설명서가 쉽게 나왔으면
- 열악한 교육환경
- 각종 농산물 저공해 식품
-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보호
- 농업인 자질 개발해 이모작 등 수확·이익증가 할 수 있도록

2. 농업인 분야별 건의사항

① 농업정책 전반

- 농업정책의 일관성 및 다양한 품목별 보존대책 필요
- 7ha 이상의 논농업 직불제 시행에 대한 문제해결 요망
- 실질적인 119조원 투입 농업정책이 되어주길
- 쌀 품질 향상은 긍정적으로 생각
- 농산물의 위해물질 등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분위기 조성 필요
- 농한기 인력활용대책 필요
- 직불금 상향 조정 및 농촌인력과 후계자 육성 급선무
- 정부에서 실질적인 농촌 살리기 필요
- 119조원 투융자사업 정책에 고령 농촌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FTA 협상 등으로 농촌 피해보상 범위를 넓혀 주길
- 농업, 축산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 필요
- 농촌실정에 맞는 농자재 가격 인하 필요
-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 실현, 면세유 확대 및 농기계 반값 공급 확대
- 정권교체 때마다 달라지는 농업정책이 아닌 일관성 있게 임해주길
- 정부는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보호정책을 펼쳐주길
- 농산물 전량 구매제 필요
- 농촌노인 70세 이상에게 경로수당 지급하길
- 장기적인 농업정책 수립이 필요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
- 농산물 유통가격 표시제도 필요
-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사짓기가 힘들어짐
- 정부는 정책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
- 농업정책에 대한 일괄된 진행이 필요
- 농자재 가격 상승이 농산물 생산비에 미치지 못해 어려움이 많음
- 쌀정책은 식량안보, 농가소득 보장,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등의 차원에서 다루길

-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직접 보상과 농자재 가격 인하 요망
-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실시로 농업인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길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 상인에 대한 단속이 필요
- 각종 공공요금, 농자재 가격 등 인상에 반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살기 어려워
- 시군기술센터를 진흥청으로 이관하여 지도소 기능을 활성화 하여야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수급예측 등을 조사분석한 동향 월 2회 이상 제공
-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워
- 농자재 가격 인상과 쌀 가격 하락은 너무 맞지 않는 정책
- 규격을 중시하는 시설하우스 피해 보상기준은 부적절
- 농업정책의 실패를 다른 요인으로 책임전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 농가소득이나 생산성을 등한시하는 농촌 환경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시정되어야 할 것
- 한·중 FTA협상에 따른 농업 피해가 우려됨
- 소득보전법 제정 필요
- 농업시장 개방, 농산물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농업대책이 필요
- 농업인을 위한 가격 보장제도 시급
- 정부의 과감한 농업정책 추진 필요
- 소농을 위한 농업자금이 필요
- 농가 부채 경감 대책이 필요
- 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산물 수입 최소화와 보상 필요
- 여성 농업인 법적 지위 보장
- 귀농을 위한 정책 필요
-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 추진 필요
- 농가부채 및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촌 생활이 점차 어려워
- 특용작물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 농업보호 방안 마련 후 시장개방을 해야 할 것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축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농지 잠식이 걱정
- 고품질·고소득 농업을 개발 육성하고 가공수출도 장려하여야

- 농촌 사회 모든 문제에 대해 도시와 비슷한 조건이 되어야 할 것
- 식량안보차원의 우리쌀 보호과 환경농업 육성으로 국토보전에 힘써야
- 농산물 가격 안정보장,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의 피해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필요
- 쌀 목표가격 인하는 불합리적이며, 바이오 에너지 작물재배 대책 조속히 수립할 것
- 농산물 가격보상 대책 및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의 미흡
- 농촌 후계 인력의 어려움
- 농가부채에 따른 어려움
- 발농사 농가도 최소한의 직불제가 실현되어야 할 것
- 농업은 농민이, 판매는 농협이, 재정관리와 유통 감시는 정부가 맡아야 할 것
- 자연환경 보전 차원의 농업 보호 및 지원
- 직불제 확대 필요
- 논에 대한 규제 완화
-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이 되길
- 농업 전분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
- 품종개발, 연구, 유통 홍보 투자하여야
-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지만,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매우 어려워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이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 시대 흐름에 따른 농업정책과 도시민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 생산이 필요
- 실질적인 농촌 노인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
-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정부차원의 소득 보전정책이 필요
- 농산물 가격 안정, 농촌 문화시설 확충 필요
- 내세우는 공약이 아니라 실천적인 공약으로 임해주길
-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
- 농촌인구의 고령화 대책이 필요
- 도시민의 귀농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
- 농업기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 정부의 119조원 투융자사업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농정이 되길 바라는
- 지역별 특화작물을 선정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판매망 확보가 이루어져야

- 농업 전반에 대한 명분있는 정책 시행 필요
- 현실적인 농업정책 추진
-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보조금 요망
-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이 되길
- 경작 면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
- 창고시설에 대한 기준(설계비, 자재비 등) 완화 필요
- 새정권은 10대 농정공약 이행은 물론 FTA의 인준에 대한 재검토 요망
- 농촌생활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 농가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필요
-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농촌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이 되길
- 농산물 가격, 농가부채, 농자재 가격 등 정부차원의 지원 요망
- 농업용 유류의 면세 요망
- 국가안보차원의 쌀 장려와 수매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 119조원 투융자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 사용되길
- 농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 인하로 농가부채만 늘어감
- 새정부는 앞으로 농업정책 전반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주었으면
- 농촌 노령화로 인한 귀농정책 장려 등 후계인력 확보 노력이 필요

② 농산물 유통, 가격

- 철저한 농산물 유통 단속 필요
-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교류 필요
- 농산물 직거래 필요
- 쿨드체인 방식을 채택하여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었으면
- 농산물 가격이 정당해질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 농산물 가격에 따른 농자재 가격의 직간접적인 보상 필요
-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
- 농산물 가격 안정, 중간 상인 폭리 시정 필요

- 농산물의 정확한 식부면적과 이에 대한 선진국 사례에 대한 정보 필요
-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되어주길
-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과 공산품의 인상비율이 동일해야 할 것
- 농산물 가격 및 판로에 따른 농산물 유통 개선이 시급
-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유통경로를 축소해야
- 안전한 농산물이 제공을 위해 중간 마진을 줄여야
- 농산물 직거래 확대 필요
- 농산물 유통경로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의 합리화 필요
- 농산물 유통 개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해주길
- 수입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농가소득 하락 등에 따른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해주길
- 농산물 판매금액과 생산비와의 차액을 정부에서 보상해야
- 농산물 유통문제 개선 필요
-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필요
-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의 활성화와 대량 소비처의 확대 개발 필요
- 확실적인 농산물 유통체계의 개선 필요
- 농산물 가격이 보전되어야
- 농가소득을 위해 농협은 변해야 할 것
- 농산물 판매가격의 불안정 해소 및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규제 강화
- 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들의 적지는 계속됨
- 농산물 생산 판매시 관련기관의 철저한 교육과 홍보 필요
- 국내 농업을 위해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최소화 해야
- 농산물 가격은 하락한데 비해 농자재 가격은 계속 인상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 구조로 변해야 할 것
-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 필요
-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 농산물 가격 안정화로 도시민들이 마음 놓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실정

-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 예시제 실시 필요
- 농산물 가격 보장해 주어야
- 농산물 유통망 개선 필요
-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필요
- 가격예시제, 지역특성 재배 제한, 1품목 전문성 제도 운영 필요
-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농협에서 책임지고 유통해 주었으면
- 농산물 가격의 심한 증폭으로 안전한 농가소득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 선진국과 같은 농산물 생산, 유통 가격 등이 확실히 보장되는 실명제 농업정책이 필요
- 농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여 힘들어
-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농산물 유통과정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피해를 보고 있음
- 농산물 가격 예시제를 통해 농업인의 의욕을 돋궈 주길
- 농산물 가격에 적극 관심을 두어야
- 중간마진을 줄이고 좀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필요
- 높은 중간마진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해 계약재배 자조금을 육성하여야
- 농산물의 판로 부족과 낮은 가격으로 농가소득이 낮아짐
-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농가소득이 희박함
- 농산물 가격 보장으로 농가소득이 늘어나길 바람
- 농축산물 생산원가를 반영한 정부차원의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 농산물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주길
-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질서 확립
- 농산물 가격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농산물 유통 및 가격 부분의 정보제공 필요
- 자꾸만 하락하는 농산물 가격으로 어려워
- 낮은 농산물 가격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촌은 어려워

- 정부차원의 농산물 유통 지원과 가격 안정화 필요
- 우선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
- 안전된 농산물 가격 유지가 필요

③ 농업개방, 국제협상

- 주체성있는 국제협상이 되길
- 농업인의 입상에 선 FTA협상이 되길
- 농업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농업, 농촌을 지킬 수 있길
- 농업 시장개방은 불가피하지만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최대한 이루어져야
- FTA로 피해본 농업인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
- 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 분야에 폭넓은 연구가 필요
- 농업을 개방하더라도 피해 농업인에게는 보상해 주어야
- 농업개방에 따른 인건비 등의 가격이 문제
-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하는 대신공산품 수출로 농산물의 피해 보상을 해야
- 발농사 직불제를 실시하여 최저 생산비 및 평균 소득을 환산해 농가에 지급되어야
- FTA에 따른 농업피해의 과감한 보상 및 대책이 요구됨
- FTA 협상 이전에 고령화된 농업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
-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철저히 지켜주어야

④ 쌀산업 정책

- 쌀값 계속 하락하고 농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해 희망이 없어
- 적극적인 쌀 생산이 최우선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 쌀수매가 품종별·품위별 가격제도로 바뀌어야 우리쌀 고품질화를 앞당길 수 있어
- 쌀값 하락에 따른 보상이 필요
- 쌀가격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주길
- 점차 쌀농사 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농어촌 정책이 불분명해 공동화 되고 있어
- 쌀 수매 가격이 너무 낮음
- 쌀산업 정책을 너무 어렵게 해 농업인들의 의욕상실이 큼

- 지역별 환경과 기후에 맞는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사업으로 전환 필요
- 벼를 정부에서 전량 구매해 쌀값이 안정되길
- 농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나 쌀가격은 그대로여서 힘들어
- 쌀수입은 그나마 적자 투성이인 농업에 쌀값의 하락을 가져옴
- 농자재 가격 인상과 쌀값하락에 정부가 책임져야
-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논을 제외하고 농토평장뿐만아니라 농수로 정비에 신경써야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필요
- 쌀값은 계속 하락하지만, 쌀목표가격은 유지되어야
- 정부는 농업인 편에서 가격타산을 맞추어야
- 쌀농사를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 추곡구매제를 부활해야
- 전량구매를 받아주어야
-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촌지원을 계속한다면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
- 쌀은 국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식량으로 개방은 절대로 불가
- 정부의 전량구매를 통해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 수 있도록 해주길
- 쌀은 가장 중요한 농산물인데 가격은 제일 싸고, 인력은 고령화되어 어려워
- 현재 직불제 없애고 판매하고 있는 벼값을 올려야
- 전업농 육성 등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없어 아쉬워
- 쌀산업 정책에 있어 값을 미리 알아야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 수 있을 것
- 수입쌀 불법 유통을 철저히 근절해야 국산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
-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농촌은 폐허되고 말 것
-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해야 하며 경지면적을 제한하지 말아야
- 정부 구매가 점점 줄어들고 구매가격도 낮아져 농사짓기 힘들어짐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수확과 동시에 농협을 통한 현지수매 등을 실시해야

⑤ 영농자금, 농가부채

- 농협의 농가부채를 장기저리자금으로 전환, 지원해 준 자금은 장기무이자자금으로 해주길
- 농산물 수입과 농협의 높은 금리로 농가부채는 오르고 있어 어렵다는

- 농자재 가격상승 및 시설투자비 과다로 인한 농가부채 증가
- 농자재 가격이 농산물 값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쌌
- 농가부채를 장기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해야
-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큼
- 각종 농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확대 적용해 주길
- 인건비와 농자재 값은 오르고, 생산 농산물은 동결 되니까 농가부채만 늘어감
- 농가부채를 장기간으로 대출하고 이자는 0.2%정도 해주길
- 공적자금 투입으로 농가부채를 탕감해야
- 농가에 부채가 있으니 벼 수매를 더 많이 받아 주어야
- 농촌의 젊은 농업인들을 농가부채 때문에 농촌에 잡아두는 악순환을 타파해야
- 농가부채에 대한 금리 부담이 커 정부의 관심이 필요
- 농가부채 상환시 일천만원 이상은 10년 분할 상환으로 해주길
- 영농자금 이자율 1.5% 인하 및 농가부채 탕감 정책을 반드시 반영해 주길
- 정착자금 부분에서 금리인하로 부담을 주지 않고 상환기간도 연장해 주길
- 농가부채 및 보증인 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많음
- 영농자금의 대출 증가와 농가부채를 경감해 주길
- 공적자금을 쌀산업에도 지원하여 농촌경제를 살고, 농가부채 해결에도 지원되어야
- 농협에 연체로 영농자금을 쓸 수가 없어 농가부채만 늘어감
- 농가부채는 이자를 지원하고 원금만 분할상환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 영농자금이 축소되기엔 어려움이 있고, 높은 이자율로 부담이 많다는
- 농산물가격 하락과 농가부채 이자율 상승으로 값는데 힘들어
- 농가부채를 위해 상환 기일을 연장해주길
- 농가소득 저하와 농업 경영비, 기타 공공요금 인상으로 농가부채 증가
- 기업에만 지원하지 말고 농촌의 부채탕감에도 신경써 주길
- 각종 상호 금융자금 금리 인하
- 농촌 영농후계자 자금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관이 필요
- 농가부채가 늘어가는 추세로 해결책이 시급
- 영농자금은 담보제공이 되길 바람

- 농사를 지어도 부채에 대한 원리금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 어려움이 많음
- 정부에서 농자재 가격 인하, 농가부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어야
- 농가부채 악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
-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영농자금 한도도 늘려주어야
- 영농자금 확대와 농가부채 상환도 저리자금으로 연기 요망
- 농촌의 고령화, 소득 및 경쟁력 악화로 농가부채 상환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
- 농가부채는 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을 장기상환토록 해야
- 농가부채에 대해 장기상환으로 바뀌어야
- 현재 농가부채의 범위를 조사하여 개인별 대책을 강구해야
- 무절제한 예산 지원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감독이 필요
- 농산물 가격은 낮은데, 농자재 가격 및 유통대 인상으로 농가부채가 늘어만 감
- 영농자금을 필요한 만큼 대출, 무이자, 농가부채 탕감 노력 필요
- 필요한 사람부터 찾아 지원금 액수를 정했으면
- 상호금융자금을 장기분할 저리 자금으로 전환하였으면
- 농협 영농자금 및 후계자금을 방출해 농업 육성에 잘 쓰여지는지 감시와 지도 필요
- 농가부채 탕감시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 농가부채 전부 무이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이 필요
- 생산성있는 영농자금지원, 기존 농가부채는 탕감 및 장기저리 용자토록
- 영농자금을 확대지원하고 농가부채를 탕감해야
- 농가부채 특별법을 제정하여 하루속히 부채를 해결해야
- 농자재 가격 상승은 농가부채의 주원인이므로 대책마련이 필요
- 농업수익이 적어 결국 농가부채만 증가
- 농가 자금지원은 보증내지 담보물건이 없어 빚 좋은 개살구 역할밖에 안됨
- 영농자금을 확대하고 농가부채는 무이자에 가까운 장기저리로 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 무리한 영농계획 및 농기계 구입으로 농가부채만 증가되어 이에 대한 감독이 절실
-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정책 방안 촉구와 해결 방안 모색
- 농촌발전을 위해 무이자 영농자금과 농가부채 탕감을 과감하게 해야
- 파산, 개인회생때문에 농수축협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 영농자금 확대, 농가부채 탕감, 젊은 농촌 거주자에게 기회 부여로 농촌 지원 확대
- 소득 감소, 높은 세금 등으로 늘어가는 농가부채에 대한 탕감정책이 필요
- 농가부채 상환시기(농번기)를 수정해 달라
- 자산능력이 부족해 실제 대출의 문턱이 높아 이를 해결해 주길
- 농가부채 경감이나 탕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부채 동결, 부채상환 프로그램, 소득의 일정부분 적립 등으로 농가부채를 해결해야
- 농촌도 평야지대와 산간지대 차별이 심해 산간지대도 많은 혜택을 주어야
- 영농자금 지원 감소 등으로 농가부채가 증가해 정부의 장기적인 자금지원이 필요
-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한 후에 농산물을 개방했으면
- 농가부채에 관한 정부의 관여가 없어야
- 정부가 농가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어보임
- 농가부채는 늘어만 가 근심이 많음
- 농가부채에 대해 장기저리 분할 상환제 도입
- 농가부채 해결이라는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
- 농가부채를 무이자 장기상환 할 수 있게 조치 건의, 영농자금의 확대 지원 요망
-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가부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 영농자금 지원 및 영농부채 탕감 정책은 확실하게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해 주어야
- 농가부채의 이자율 조정 및 장기저리 이자상환 조치 바람
- 농가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길
-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분할상환 정책을 마련하였으면
- 농가부채를 농축협 편의 위주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젊은 후계자들이 기술, 시설자금, 판매유통,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정책이면 좋겠음
- 젊은 농촌 사람들이 부채에 매달려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 영농자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대출완화와 농가부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 영농자금을 좀 더 확대해 주면 좋겠음
- 정책자금으로 시작된 농업이 자연재해로 실패했다면 부채는 탕감되어야
- 젊은 사람들은 농가부채 탕감만을 외치는데 절대 농가부채를 탕감해서는 안됨

⑥ 농촌인력, 후계인력

- 농촌의 후계자 인력이 문제
- 정부는 농촌의 젊은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 농촌총각 결혼문제 등 후계 인력이 없음
- 농촌의 인력문제가 심각하고, 후계자와 귀농자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후계 인력 양성은 필수적임
-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바람
-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인력이 제일 문제
-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농촌공사의 임대차 연령을 70대로 연장해야
-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후계 인력 양성이 필요
- 모자라는 농촌 인력을 값싼 외국인들로 대체하여야
- 후계인력 단절로 머지않은 후일 농촌의 붕괴가 걱정됨
- 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정부지원으로 정착시켜야
-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펴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 농촌의 인력확보와 후계자 양성을 위해 교육정책을 바꿔야
- 현재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매우 위태롭기까지 한 실정
- 농촌의 고령화로 후계인 대책이 필요
- 향후 후계인력 양성이 급선무이며 우선 정부지원 활성화로 양성이 필요
- 젊은 인력이 있어야 농촌이 발전할 수 있음
- 농촌 노인 등 일자리 창출이 필요
- 참신한 농업 후계인력을 찾아 생기있는 농촌이 되었으면
-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많은 지원이 필요
- 농촌의 고령화와 영농자재 및 비료값이 인상되어 농사짓기가 힘들어
- 정부는 젊은 사람들이 귀농할 수 있는 유인책을 펼쳐 주길
- 농촌인력 노후화로 인력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
- 농촌에 후계인력 부족으로 노동력이 없어서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있음
- 젊은이들의 귀농으로 농촌의 인력부족을 해소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 농촌인력 후계인을 많이 육성해야

-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농사인력 중 일부가 공공근로로 빠져 영농일손이 부족함
- 후계인력은 안정된 조건이 있어야 농촌에서 살려고 할 것임
- 정부는 귀농자나 젊은 인력이 농촌으로 유입되도록 유인책을 써야 함
- 새정부는 전문경영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에 농업정책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람
- 가격에 따른 농산물 수입은 농산물의 무기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
- 농가에 젊은 인력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음
- 젊은 농촌인력이 절실
- 정부는 농촌인력의 고령화 대책과 많은 연구, 그리고 현지에 맞는 농어촌 행정에 임하여 주길
- 농촌 후계인력을 기술교육과 저리 영농자금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 후계인력을 정책적으로 육성시켜 농촌발전에 기여시키는 정책 필요
- 농업계 고등학교에 특혜를 주어 농촌 후계자를 대량 육성해야
-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와 살려면 소득, 문화 혜택, 교육 격차 등이 해소되어야 할 것
- 후계 인력에게 많은 보조를 해주어야
- 농촌의 자녀교육과 후계인력을 어떻게 할것인지 깊이 고민할 때
- 농촌에 인력 지원이 필요
- 농촌 고령화로 향후 5년 후의 농촌은 노동력 부재가 심각할 것
- 농촌인력이 부족해 농자재의 기계화 및 자동화가 절실히 요구됨
- 농업을 발전 승계하려면 세금감면 및 세제 혜택에 주력해야
- 농촌에 후계자가 없어짐
-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요망
- 농촌 후계가자 없어 어려움

⑦ 농지정책

- 농지거래 규제를 완화해 농지주인을 도시인까지 확대해야
- 우량농지의 매매로 농지가격 향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 농촌지역 토지 규제 완화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요망
- 비효율적인 농지규제를 풀어야 할 것
- 도시인들에게도 농지 소유를 허용해야 할 것

- 농지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누구든지 사고 팔수 있게 했으면
- 도시민 농지보유 확대가 필요하며 도시민 농지를 소작하는 것도 현실에 맞을 것
- 현재 농촌에서 농지 매매를 활성화해 농지가격을 제대로 매매할 수 있어야 할 것
-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양도세나 증여세 없이 양도, 증여할 수 있도록 해주길
- 농지구입 자금을 어느정도 실거래 가격으로 용자를 해주어야
-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 도시민, 농업인 아무나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
-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농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음
- 8년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 농지거래 자유화로 도농격차를 줄일 수 있게 농업진흥지역 보호구역을 없애 주길
- 농지를 자유자재로 개발, 매매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필요
- 농지는 농업 실소유자가 소유하여야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
- 농지를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 농지 매매를 자유롭게 하도록 모든 규제를 풀어주길
- 평야지대 이외에는 농림지역을 해제하여 별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 소농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혜택을 주길
- 도시민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길
- 농지정책 활성화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주길
- 산간지역 농지는 매매도 없고, 임대해도 임대금을 줄 사람도 없어 휴경지가 늘어만 감
- 고령농민의 경영이양 혜택을 많이 주어 농지은행 업무를 활성화 하여야
- 자경 8년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가 없더니 슬그머니 생긴 이유를 모르겠음
- 119조원 투융자사업이 말은 좋은데 실질적인 것은 없음
- 농지취득 이전 등기 관련법 개정 면적 제한 폐지 등
- 농촌지역 토지매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종합 세금을 완화해 주길
- 농민이 농지를 매입 매매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악법
- 농지가격에 비해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
- 농지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매매 시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주어야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권 보호해 주길
- 농지거래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민 유입이 필요
- 농촌의 고령화로 도시민의 농지 구입을 통해 관광지로 조성이 필요할 것
- 농지는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없애야
- 도시민도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지거래 규제 완화 필요
- 농지거래 규제 완화는 필요하며, 농지를 구입한 지역에 거주하는 정책 필요
- 경지정리 지역이라도 농가용 주택이나 창고 등은 건축할 수 있도록 했으면
- 농지를 도시인도 소유하여 농촌에 도시민들의 주거 공간을 확대해야
- 농지를 매각하려고 해도 규제가 많고, 세금이 너무 많아 매각을 못하는 실정
-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짓고 농지를 규모화·전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마련되길
- 농지은행 확대운영 및 농지거래 규제 완화 필요

⑧ 영농자재

- PE필름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부담이 가중
- 농자재 구입 시 정부 보조금 필요
- 정부 보조금 대상자를 경작하는 농지 규모에 상한선을 두어 지원해야
- 영농자재에 대한 정부 보조가 필요
- 정부는 영농자재의 일부를 보조해 농민이 고향을 떠나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길
- 농기구의 수입으로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비료값이 인상하여 생산비 못 미치는 실정
- 영농자재, 비료 등 가격 인하 필요
- 농산물 값은 하락하는데 자재값은 계속 오르니 살기 힘들어
- 영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하여 농사짓기 힘들어
- 대형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정부에서 농자재 가격인상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 농자재 및 비료값 등 모든 농자재 가격을 동결시켜야
- 농자재 값이 너무 높음
- 영농자재, 유기질 비료 등 권장 소비자 가격이 정착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
- 쌀값은 매년 동일하고 농자재 값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현실이 농촌을 힘들어

- 농기계 지원확대 요망, 면세유 지속 지원
- 농기계 반값 공급 및 면세유 계속 공급 요망
- 비료값 지원이 시급
- 인건비나 영농자재 가격 인하에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
- 비료 농약 가격은 오르나 농산물 가격은 하락해 농사가 힘들어
- 농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며, 비료, 농약도 비싸 힘들어
- 영농자재값을 인하해 주길
- 대형 농기계에 따른 농로 개선이 필요
- 추곡수매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기름값 및 비료값은 인상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됨
- 농자재, 비료 등 모든 자재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힘들어
- 농산물 시세는 낮고, 농자재 및 농기계 부품은 너무 비싸 생산비도 안 나옴
- 비료 영농자재 값 동결 및 인하
- 비료값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 매년 영농자재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연간 순수익이 거의 없음
-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은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 문제
- 농기계, 농약, 비료 등의 영농자재 값이 대폭 인하되어야 할 것
- 농자재 가격은 오르나 농산물 판매가격은 오히려 내려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
- 영농비 지원 확대, 영농자재비 지원 확대
- 영농자재 원가공급 및 반값 공급 요망
- 비료값이 너무 인상되어 농사짓기 힘들어
- 영농자재 가격을 안정시켜 주길
- 생산비보다 영농자재 값이 너무 비쌌
-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나 농자재 값은 인상되고, 기름 값이 비싸 농사지을 의욕조차 없음
- 농자재, 농약, 비료 값이 매년 상승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가격인하 필요
- 영농자재 값에 대한 정부보조가 절실한 시기
- 농산물 가격은 하락 또는 동결인데 비료값은 계속 인상돼 정부의 보조가 필요
-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모든 농자재가 농촌경영에 맞지 않아 힘들어
- 매년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농사에 대한 의욕상실이 가장 큰 문제

-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는 정부 임대 농기계 지원 바람
- 영농자재 및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이니 농촌에 발전이 없음
- 정부지원으로 농자재 값을 안정시켜야
- 쌀전업농 대여 농기계 보조 지원 사업이 미흡

⑨ 농업기관

- 지역자치 단체를 진흥청 산하에 두는 것이 효율적일 듯
- 농업기관에 힘을 실어주어 지역 농민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음
-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일원화가 필요
- 농협, 농정 조직의 개혁과 역할 기대
- 현지통신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⑩ 농촌 지역개발, 복지

- 오지 농촌의 불편함을 행정당국이 잘 파악해 주길
-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해 주길
- 지역별 특산물을 지정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길
- 주거가 없는 마을에서는 주택을 개량하고자 해도 매우 힘들어
- 농촌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농가주택 개량시 용자보다 보조가 있어야 할 것
- 고령화 현상이 심하므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
- 고령 농촌노인들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이 필요
- 농촌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 필요
- 농촌지역 치매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대 설치 요망
- 농산물 유통가격, 영농자금, 부채, 후계인력, 복지 환경 개선 등 모두가 열악
- 농촌의 고령층에 대한 법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 정부의 복지 정책을 마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 농촌지역에 조속히 복지시설이 요망됨
- 젊은이들이 귀농해 농촌을 살려 살기좋은 농촌이 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 농업이 살아야 교육도 살고, 복지정책도 살 수 있음

- 쾌적한 환경, 생명공학 발전, 국토환경보전 등 높은 차원으로 전환이 필요
- 농로 개선이 필요
- 농지정리, 받기반 공사를 하여 농촌인력을 해소해야
- 농촌지역의 복지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지역특산물 개발,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으로 지원필요
- 일관된 농업정책이 되길 바람
- 농촌의 여러 방면에 복지 지원을 바람
- 지역에 맞게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여야 함

⑪ 영농환경 개선

- 친환경 농업의 인증기관에서 유통까지 책임지고 소비자와 연계하여 주기 바람
-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산업정보단지 등의 반촌도시를 막아야 할 것
- 농촌 노인들의 의료, 복지 및 기초생활 보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

⑫ 기타

-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지켜져야 할 것
- 농지거래가 쉬워질 수 있는 방안이 법률이 재정되어야
- 농촌에도 고도화된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
- 농촌노인 교육 정부지원 실시
-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힘들어
- 농촌마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
- 농협중앙회나 지역 농협이 실질적인 농업지원책이 되도록 개혁되어야
- 농업 살리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 지역별로 특화작물 계약재배 확대 실시
- 농업경제 안정화가 급선무
- 인력이 부족
- 농어민의 부채를 저리 장기자금으로 전환해야

- 직불제 경작인 위주로 농업정책이 이루어지고 농수로 및 경작로 등이 대폭 수정되어야
- 농촌의 발전 방향을 연구해 주길
- 농촌의 노령인에게도 복지 및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젊은이와 같이 주어져야
- 야생조수 개체 증가로 농산물 피해가 큼

부 록 2

조사표

<도시민 조사표>

<선문>

SQ 1) 지역

-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경기
9.강원 10.충북 11.충남 12.전북 13.전남 14.경북 15.경남 16.제주

DQ 1) 지역규모 1. 특광역시 2. 시 지역

DQ 2) 성별 1. 남자 2. 여자

DQ 3) 귀하의 연령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또는 만70세 이상 면접중단!!

DQ 4) 귀하는 농촌에서 사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DQ 5) 부모나 형제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농업·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식

문1) 귀하께서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2.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3.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4.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5. 관심 있게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문2) 아래 제시하는 예문에 대해 중요도 순으로 각각 한가지씩만 1, 2위로 기재해 주세요.
 각 보기는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 분	1순위	2순위
㉠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1위, 2위 기재)		
㉡ 앞으로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해질 역할(1위, 2위 기재)		
1. 식량 안정적 공급 2. 국토의 균형발전 3. 자연환경 보전 4. 전통문화의 계승 5. 관광 및 휴식의 장소 6. 전원생활의 공간 7. 기타(적을 것 : _____)		

문3) 농업이나 농촌과 관련된 다음 몇 가지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촌체험을 의무화 해야한다	1	2
㉡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1	2
㉢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1	2
㉣ 농업이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1	2
㉤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1	2
㉥ 우리 나라 농업이 국제경쟁력이 있다	1	2
㉦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1	2
㉧ 우리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1	2
㉨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한다	1	2
㉩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다	1	2
㉪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가 농가소득을 보상해 줘야한다	1	2

문4) 귀하는 농촌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아래 제시하는 예시 중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각 하나씩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이미지 () ³³⁻³⁴	부정이미지 () ³⁵⁻³⁶
1.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	1.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2. 노후의 생활에 적합한 곳	2. 문화, 보건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
3.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	3.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곳
4. 재해를 막고 수원을 지키는 기능이 있는 곳	4. 자연재해와 병충해가 되풀이 되는 곳
5. 인정이 풍부하고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있는 곳	5. 가난하고 힘들고 비전이 없는 곳
6. 기타(적을 것 :)	6. 기타(적을 것 :)

문5) 귀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농업·농촌을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가장 우려되십니까?

1.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빈집증가, 어린이 감소 등)
2. 농업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
3. 농촌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4.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농산물 안전성 문제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6) 귀하께서는 앞으로 10년 후의 농촌생활이 현재와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
2.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3.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4.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다
5. 현재보다 훨씬 살기 어려울 것이다

문7) 귀하는 은퇴 후 혹은 그 이전이라도 여건이 되면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1. 매우 많다
2. 조금 있다 **▶ 문7-1)로 갈 것**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 문8)로 갈 것**

문7-1) (문 7에서 1, 2번 응답자만) 그럼,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실천할 계획이십니까?

- 1. 3년 내 2. 5년 내 3. 7년 내 4. 10년 내
- 5. 10년 이후 6.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문7-2) (문 7에서 1, 2번 응답자만)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 2. 농업을 경영해 안전한 농산물을 자급하기 위해
- 3.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 4.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 5. 경로사상과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 6.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 7. 땅값과 생활비가 도시보다 싸므로 여유있게 살 수 있어서
- 8. 기타(적을 것 : _____)

문8) 귀하는 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을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많다 2. 많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없다 5. 전혀 없다

문9) 국가정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적극 찬성한다
- 2. 찬성한다
- 3. 잘 모르겠다
- 4. 반대한다
- 5. 적극 반대한다

▶ **문10)으로 갈 것**

문9-1) (문9의 4, 5 응답자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 2. 농촌과 관련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보전해야 하므로
- 3.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4. 농촌의 환경 및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보전되어지므로
-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10)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도 같이 약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기대

문11) 귀하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1. 매우 많다 2. 대체로 많은 편이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12) 귀하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를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시는지 아래 항목 중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TV 2. 라디오 3. 중앙일간지(신문)
4. 농업관련 전문지 5. 잡지 6. 인터넷
7. 정책 홍보물 8. 기타(적을 것 : _____)

문13) 귀하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가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많다 2. 대체로 많은 편이다 3. 별로 관계없다
4. 전혀 관계가 없다 5. 잘 모르겠다

문14) 귀하께서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는 무엇입니까?

1. 농촌복지 2. 농식품 안전성 3.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4. FTA 등 국제협상 5. 농산물 가격 6. 농가 소득안정
7. 농업인 교육 8. 수질 및 토양오염 등 농업환경
9. 기타(적을 것 : _____)

문15) 귀하는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정부가 이 분야에 얼마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충분하다 _____
2. 충분한 편이다 _____ → **문16)으로 갈 것**

3. 불충분하다 _____
4. 매우 불충분하다 _____



문15-1) (문 15에서 3, 4번 응답자만) 그럼, 정부가 농업·농촌·농업인 문제에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가 전체 경제에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2.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3. 국민들의 관심이나 관계가 적기 때문에
4. 농업계의 정치력이 작기 때문에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16) 지난 2007년 12월 19일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어 2008년 2월 25일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귀하는 새정부가 농업·농촌문제를 소비자인 도시민 입장대로 어느 정도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1. 매우 기대가 크다
2. 기대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기대가 작은 편이다
5.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문17) 새정부는 농업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로 농지거래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인도 농지를 손쉽게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농업인은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극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적극 반대한다

문18) 어려운 농업문제를 해소하는데 농업협동조합, 즉 농협의 역할 변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귀하는 새정부가 이러한 농업협동조합 개혁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농협은 첫째, 농업정책 자금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금융사업과 둘째,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유통을 대행하고 농자재 등을 공동 구매해 지원하는 경제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 역할 변화에 관한 의견으로는 이런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와 조직의 슬림화 등이 있습니다.

1.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2.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정부가 전혀 간섭할 필요가 없다

농업 개방과 대책에 대한 견해

문19)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당하는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1. 농산물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	1	2
2. 농산물시장이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1	2
3.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더 유리해진다	1	2
4. 국가는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1	2

문20) 귀하께서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더 이상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안된다
2. 국내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3. 농산물 시장개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4. 농산물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문21) 귀하께서는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1.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2. 우리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3.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4. 기타(적을 것 : _____)

문22) 새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원안대로 국회에서 비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비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3. 국회 비준보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문23) 새정부는 한-중,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향후 예상되는 국제통상협상에서 농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적극적인 농업보호
2. 기본적으로 농업보호에 무게
3. 국익을 최우선하여 필요하면 농업개방 확대
4. 적극적인 농업개방

문24) 귀하께서는 정부의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수입개방 확대에 의한 농가피해 보상
2.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유도
3.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 등 농업의 구조조정
4. 별다른 대책 필요 없음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25) 귀하께서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정부가 피해액을 직접 보상해야 한다
2. 정부가 다른 품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간접 보상해야 한다
3. 시장개방에 따라 수혜를 보는 소비자 또는 기업이 보상해야 한다
4. 수혜든 피해든 일반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26) 정부가 정해진 농업예산을 아래 제시하는 분야에 배분해 지원한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순위
1. 농업의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농업전환, 후계인력 육성 등)	
2. 식량자급률 향상 (쌀 등 주요곡물 안정적 확보)	
3. 식품의 안전성 확보 (친환경농산물 생산, 식품안전 예방관리)	
4. 농산물 유통 개선 (유통비용 감소로 합리적인 가격형성)	
5. 농촌지역 개발과 보전의 조화 (휴식공간 유지와 지역균형발전)	
6. 농촌주민 복지, 생활여건 확충(양극화 해소)	

문27) 귀하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속에서 농업·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농업인 2. 정부, 관련 기관 3. 소비자(납세자)
4. 관련 학계 5. 언론 6. 기타(적을 것 : _____)

식품안전과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

문28) 귀하께서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다음 중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지 그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	------------	--	------------	--	------------	--	------------	--

1. 가격 2. 브랜드 유무 3. 생산지(국산/외국산)
4. 안전성 5. 품질(맛)

문29) 귀하께서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2.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30) 귀하께서는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제품의 성분 및 효능 표시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
2. 농약 등 위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
3. 불량 농식품 생산자 엄중 처벌
4. 수입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31) 귀하께서는 2007년 한해 농촌관광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 농촌관광은 농촌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하거나 농가민박을 경험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농촌에 거주하는 친지방문은 제외됩니다.

총 _____ 회 —▶ **'0'회는 문32)로 갈 것**

문31-1) (문31에서 농촌관광 경험이 있으신 분만) 그럼, 농촌관광에서 느낀 만족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 5. 매우 불만

문32) 귀하가 이전에 농촌에서 농업 등 자연을 가까이 하는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하실 때 가장 불편했던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 교통 2. 숙박시설 3. 비싼 요금 4. 취사
5. 주변환경 청결 미흡 6. 불친절 7. 기타(적을 것 : _____)

문33) 귀하께서는 앞으로 농촌에서 어떤 활동을 가장 해보고 싶으십니까?

- 1. 주말농장 2. 감자캐기 등 농사체험 3.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
- 4. 전통테마마을 체험 5. 농촌관광(민박)체험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37) 끝으로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평상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1.농업정책 2.농촌관광 3.농산물 유통, 가격 4.농산물 안전성 5.농업협상 6.쌀산업 정책 7.영농자금, 농가부채 8.농촌인력, 후계인력 9.농지 10.농업기관 11. 농촌 지역개발 복지 12.농촌 자연환경 13. 기타(적을 것 : _____)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_____ 번 내용 기재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Q 6) 실례지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농/임/어업 종사자 (가족 종사자 포함)
- 2. 자영업자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 3.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정부/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 4. 전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 5. 기술공 및 준전문가 (컴퓨터 준전문가, 경찰, 소방수, 철도기관사,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등)
- 6.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 7.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등)
- 8. 판매종사자 (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 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부, 전기·전자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예 종사자 등)
- 1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 11. 단순노무종사자 (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 12. 학생 13. 전업주부 14. 직업군인 15. 무직 16. 기타
- 99. 모름/무응답

DQ 7)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초등학교 졸업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재학 이상

DQ 8) 현재 함께 살고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 수입은 얼마정도입니까? 임대소득, 이자수입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 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1. 150만원 미만
2. 150만원~249만원
3. 250만원~349만원
4. 350만원~449만원
5. 450만원 이상

<농업인 조사표>

■ 농업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

- 1) 귀하는 5년 전에 비해 올해(2007년)의 '농촌 생활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마찬가지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 2) 작년(2006년)과 비교해 올해(2007년) '농촌 생활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마찬가지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 3) 올해(2007년)와 비교해 5년 후 '농촌생활 수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①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② 현재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③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다
- 4) 귀하는 현재 농촌 생활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 5) (문 4에서 ④, ⑤번에 답하신 분만)
 귀하는 농촌 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 ② 자녀 교육 여건 열악
 ③ 체육·보건 의료 시설 등 복지시설 미흡 ④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
 ⑤ 문화·여가시설 미흡 ⑥ 기타()
- 6)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살 계획입니까? ()
 ① 농촌에 계속 살겠다 ② 농촌을 떠날 생각이다
 ③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 올 생각이다 ④ 잘 모르겠다
- 7) (문 6에서 ②, ③번에 답하신 분만)
 농촌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 교육을 위해서
 ② 농사는 수익성이 없으므로 직업을 변경하여 돈을 벌기 위해
 ③ 농촌의 생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변해서
 ④ 노동력 부족 등 농사짓는 여건이 어려워서
 ⑤ 농사규모를 늘려갈 전망이 없어서

- ⑥ 자녀들이 도시에 정착해 있어서
- ⑦ 농촌에는 농사 이외에 할만한 일이 없어서
- ⑧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사짓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아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8), 9)번 문제 관련

< 보기 >

- ① 농산물 가격 ② 추곡수매 ③ 영농자금·농가부채 ④ 농산물 수입개방
- ⑤ 농촌지역개발 ⑥ 농촌인력 ⑦ 농작물병충해, 기상조건, 가축질병
- ⑧ 농기계, 비료, 사료가격 등 농자재 ⑨ 영농시설 현대화
- ⑩ 농지문제(매매, 가격, 진흥지역, 임대차 등) ⑪ 기타

- 8) 농사와 관련해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위 보기에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9)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위 보기에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10)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것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 11) (문 10에서 ④, ⑤번에 답하신 분만)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소득 보장 미흡) ②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③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④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 불안
 ⑤ 농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좋지 않다 ⑥ 기타()

■ 농업 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변화

- 12) 귀하께서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 ②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 ③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 ④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 ⑤ 관심 있게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13) 아래 제시하는 예문에 대해 중요도 순으로 각각 두가지씩만 1, 2위로 기재해 주세요

구 분	1순위	2순위
1)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1위, 2위 기재)		
2) 앞으로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해질 역할(1위, 2위 기재)		

<예문>

- ① 식량 안정적 공급 ② 국토의 균형발전 ③ 자연환경 보전 ④ 전통문화의 계승
 ⑤ 관광 및 휴식의 장소 ⑥ 전원생활의 공간 ⑦ 기타

14) 농업이나 농촌과 관련된 다음 몇 가지 의견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매우 찬성	② 대체로 찬성	③ 보통	④ 대체로 반대	⑤ 매우 반대
①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촌체험 의무화					
②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③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④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⑤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⑥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있다					
⑦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 물가에 비해 싸다					
⑧ 우리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⑨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한다					
⑩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다					
⑪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농가소득을 보상해 주어야한다					
⑫ 우리 나라 농업전망은 밝다					

■ 농업정책 평가와 새정부에 대한 기대

15) 귀하는 지난 5년간의 참여정부 농정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① 매우 잘했다 ② 대체로 잘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잘 못했다 ⑤ 매우 잘 못했다 ⑥ 잘 모르겠다

16) 참여정부가 농정공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성신했다 ② 대체로 성신했다 ③ 보통이다
 ④ 성실하지 않은 편이었다 ⑤ 전혀 성실하지 않았다

17) 다음은 구체적으로 ‘참여정부’가 역점 추진한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를 해 주세요.

문항	① 매우 잘했다	② 대체로 잘했다	③ 보통	④ 대체로 못했다	⑤ 매우 못했다
①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쌀산업 체질 강화 노력					
② 농지은행제 도입으로 농업구조개선 촉진					
③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개혁					
④ 직불제 예산 및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 내실화					
⑤ 고품질 우수 브랜드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⑥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이력추적제도입 등 농식품 안전성 강화					
⑦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방안 등 복지, 교육, 지역개발 확충					
⑧ 1사촌 운동 등 민간주도 도농교류 활성화					
⑨ 한-칠레 FTA, 쌀협상 피해 대책 마련					

18) 참여정부는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하는 농촌종합발전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까지의 119조원 농업 투융자사업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효과가 크다 ② 효과가 있다 ③ 보통 ④ 효과가 작은 편이다 ⑤ 효과가 없다

19) 귀하께서는 아래 제시하는 농업 투융자 사업 중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2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농지제도 개편 등 농업체질 강화
 ② 생산이력제 실시 등 친환경농업 안전성 제고
 ③ 수출용 공동브랜드 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④ 경관보전직불제 도입 등 직불제 확대
 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 경영안정 장치 강화
 ⑥ 농촌관광과 농공단지 개발 등 농외소득원 확충
 ⑦ 농촌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등 사회안전망 확충
 ⑧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등 교육·의료·복지·인프라 구축
 ⑨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 지역개발

20) 다음은 농업과 관련해 참여정부가 가장 잘한 것과 가장 잘못된 것 1개씩을 자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장 잘한 것 ()
 ② 가장 잘 못한 것 ()

- 21) 귀하께서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 농촌복지 ② 농식품 안전 ③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④ FTA 등 농업협상 ⑤ 농산물 가격 ⑥ 농가 소득안정 ⑦ 농업인 교육
 ⑧ 수질 및 토양오염 등 농업환경 ⑨ 기타 ()
- 22) 지난 2007년 12월 19일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어 2008년 2월25일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귀하는 새정부가 농업·농촌문제를 농업인의 바람대로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 ① 매우 기대가 크다 ② 기대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기대가 작은 편이다 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 23) 새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관심갖고 추진해야할 농업분야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마련
 ②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조치
 ③ 도시-농촌 양극화 해소 방안 제시
 ④ 식량자급률 및 쌀 목표가격 설정
 ⑤ 농림부 기능 개편 등 농정조직 정비
 ⑥ 농가 경영 및 소득안정 대책
 ⑦ 기타 ()
- 24) 새정부는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위한 농업분야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귀하는 아래 제시하는 공약 중 어떤 분야에 기대가 큼니까? 가장 기대하는 분야를 순서대로 3개만 기재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
 ②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농가부채동결법률’ 제정
 ③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위해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전환
 ④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해 농지의 주인을 도시인까지 확대
 ⑤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도
 ⑥ 수출 농식품기업과 지역기반 농기업 집중 육성
 ⑦ 농촌지역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조성 등 농촌지역 교육여건 확충
 ⑧ 농업인의 기초생활 보장,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보장
 ⑨ 농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농정협의체인 ‘농업회의소’ 설치
 ⑩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남북농업협력기금 조성

- 25) 귀하는 위에 제시한 공약들이 이명박 당선자의 성향이나 공약내용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면 얼마나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 ① 공약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 ② 약간 축소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켜질 것으로 본다
 - ③ 공약보다는 지원이 크게 축소될 것이다
 - ④ 전혀 지켜지지 못 할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 26) 새정부는 농업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로 농지거래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인도 농지를 손쉽게 소유할 수 있게하고, 농업인은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보통 ④ 반대하는 편 ⑤ 매우 반대
- 27) 어려운 농업문제를 해소하는데 농협의 역할 변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귀하는 새정부가 농업협동조합 개혁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유통지원 등) 분리, 중앙회장 권한 축소와 조직 슬림화 등이 이슈
 - ①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②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유도
 - ③ 정부가 전혀 간섭할 필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농업개방과 대책에 대한 견해

- 28) 귀하께서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더 이상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안된다
 - ② 국내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 ③ 농산물 시장개방은 어느정도 불가피하다
 - ④ 농산물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 29) 새정부는 한-중,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향후 예상되는 국제통상협상에서 농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본적으로 농업보호에 무게를 뒀야 한다
 - ② 국익을 최우선하여 필요하면 농업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 ③ 보호와 개방의 균형을 잘 조절해 나가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 30) 새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① 조속히 비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비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③ 국민투표에 부쳐야한다 ④ 잘 모르겠다
- 31) 귀하께서는 정부가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수입개방 확대에 의한 농가피해 보상 ②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유도
③ 경쟁력있는 농가 육성 등 농업의 구조조정 ④ 별다른 대책 필요 없음
⑤ 기타 ()
- 32) 귀하께서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가 세금으로 피해액을 직접 보상해야 한다
② 정부가 세금으로 다른 품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간접 보상해야 한다
③ 시장개방에 따라 수혜를 보는 소비자 또는 기업이 보상해야 한다
④ 수혜든 피해든 일반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⑤ 기타 ()
- 33) 귀하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속에서 농업·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업인 ② 정부, 관련 기관 ③ 소비자(납세자) ④ 관련 학계 ⑤ 언론 ⑥ 기타 ()
- 34) 귀하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른 대응에 누구의 역할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업인 ② 정부, 관련 기관 ③ 소비자(납세자) ④ 관련 학계 ⑤ 언론 ⑥ 기타 ()
- 35) 귀하께서는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제품의 성분 및 효능 표시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
② 식품 관리감독 강화
③ 농약 등 위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
④ 과학적인 시험연구와 분석(위해성 정기검사, 위해여부 모니터링)
⑤ 식품안전관리행정의 개편(일원화)
⑥ 불량 농식품 생산자 엄중 처벌
⑦ 기타 ()

■ 농촌사회와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

- 36) 살고 계신 지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복지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저소득층 복지 ② 노인복지 ③ 장애인 복지 ④ 영유아 복지
 ⑤ 아동/청소년 복지 ⑥ 여성복지 ⑦ 기타 ()
- 37) 개인의 입장에서 정부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복지부분은 무엇입니까? ()
- ① 의료비 지원 ② 교육비 지원 ③ 자녀 보육 문제 ④ 노인부양 문제
 ⑤ 농촌 사회복지시설 확충 ⑥ 농촌 문화/여가시설 확충 ⑦ 기타 ()
- 38) 농촌의 노인들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지원되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지원
 ② 농촌 노인 일자리 확대
 ③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④ 치매노인,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확대
 ⑤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현금지원 확대
 ⑥ 기타 ()
- 39) 지역(시군단위)의 공동체의식(협동심, 친밀감 등)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마을단체(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② 지자체 및 공무원
 ③ 지역공동센터(사회복지관,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등)
 ④ 학교 ⑤ 종교단체 ⑥ 좋은 이웃
 ⑦ 서비스 편의시설(상점, 우체국, 은행 등)
 ⑧ 지역행사(지역축제, 전통행사 등) ⑨ 기타
- 40) 정부가 농촌지역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농촌지역 자연환경 보호 ②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주택의 보급 및 개량
 ③ 공용버스 등 농촌지역 교통수단 확충 ④ 농촌주민의 교육과 건강 증진 시설 확충
 ⑤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 ⑥ 도시 수준의 문화시설 제공
 ⑦ 농촌지역의 지방자치 증진 ⑧ 기타 ()

41) 귀하가 거주하는 마을(리)에 외국인 며느리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명) ② 없다

42) (41번 ①번 응답자만) 외국인 며느리와 마을사람들은 왕래와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잘되고 있다 ② 잘 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안되는 편이다 ⑤ 전혀 안되는 편이다

43) 끝으로, 농업정책이나 농업문제에 대해 하고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분야	①농업정책 전반 ②농산물 유통, 가격 ③농업개방 국제협상 ④쌀산업 정책 ⑤영농자금, 농가부채 ⑥농촌인력, 후계인력 ⑦농지정책 ⑧영농자재 ⑨농업기관 ⑩농촌 지역개발, 복지 ⑪영농환경개선 ⑫기타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하니까? (번)	
내용 기재 ✎	

■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A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

- ① 평야지대 ② 산간지대 ③ 준산간지대 ④ 도시근교

A2> 귀하는 실례지만 몇 년생 이십니까? (년생)

A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무학 ② 한학 ③ 국졸 ④ 중졸 ⑤ 고졸 ⑥ 대졸(퇴)이상

A4>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연간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작목은 무엇입니까? ()

-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에 ⑥ 특작 ⑦ 기타

A5> 귀댁의 연평균 소득(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 중 임차료·비료·농약대 등 비용은 제외하되, 생활비는 포함)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1천만원 미만 ② 1천만원~2천만원미만 ③ 2천만원~3천만원미만
④ 3천만원~4천만원미만 ⑤ 4천만원~5천만원미만 ⑥ 5천만원 이상

A6> 귀하는 언제부터 영농에 종사하십니까? (년부터)

A7> 귀하는 댁에 영농후계자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③ 아직 모르겠다

A8> 귀댁의 경작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소유 및 임차농지는 포함하되 임대농지는 제외)
논(약 평), 밭(평), 과수(평), 축산(소 , 돼지 , 닭)

참고 문헌

- 김동원, 조태희. 2001. 「2000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 결과」. 농촌경제 24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06. 「농업·농촌에 대한 200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연구자료 D1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김정호. 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연구보고 R4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최경환.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4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석두, 황의식. 2002. 「농지소유 및 이용 구조의 변화와 정책 과제」. 연구보고 R4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세익, 김동원, 박혜진.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보고 R4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각연도. 「농가경제통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2005.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연구자료 240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3.

발 행 2008. 3.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문원사 02-739-3911~5

<http://www.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